

2025년도 안보정세전망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25년 안보정세 전망

2024. 12. 31.

연구책임자 정한범(국방대학교)
공동연구원 김준섭(국방대학교)
공동연구원 하도형(국방대학교)
공동연구원 이숙연(국방대학교)
공동연구원 반길주(고려대학교)
공동연구원 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공동연구원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공동연구원 최용섭(선문대학교)

본 보고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국방대학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간사

세계는 여전히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으며, 주요 강대국 간의 갈등과 협력은 복잡하게 얽히며 새로운 국제 질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은 지정학적 변화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해로, 인도-태평양 지역과 동아시아에서의 안보 환경 역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 사회의 규칙 기반 질서를 흔들고 있으며, 갈등의 장기화는 진영 대립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중동, 유라시아, 남태평양 등에서의 지정학적 연계성을 더욱 강조하며, 글로벌 사우스의 중요성 증가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동맹보다 미국을, 가치보다 이익을 외쳐온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은 이 모든 변화에 또 다른 불확실성을 더 할 가장 강력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 또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내각총리가 교체된 일본은 미일 동맹과 군사력을 강화해 나가는 흐름을 이어가면서도 새로운 전환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며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긴장을 지속적으로 고조시켜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러 협력을 통해 동북아에서의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으며, ASEAN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중 갈등 속에서 균형 외교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상황 역시 녹록치 않습니다. 통일포기와 ‘적대적 2국가론’을 공식화한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지속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러시아와의 관계를 군사동맹으로 격상시키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파병하는 등 새로운 차원의 위협으로 부상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안보 위협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북미 정상 외교의 재개 가능성이 언급되지만, 한미일 협력에 기반한 강력한 방어 체제 구축이 여전히 필수적인 이유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변화와 도전이 공존하는 2025년, 우리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도전 요인을 억제하고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와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에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는 세계와 동아시아, 한반도의 안보 정세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 내용을 기반으로 2025년도 안보 정세 전망과 대비 방향을 담은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간물이 한국의 안보와 국방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소장 박영준

목차

2025년 안보정세전망

요약본	1
-----	---

제1장

세계정세 전망

I. 미중 패권경쟁과 세계질서의 재편	8
II.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정세	10
III. 세계 안보 환경의 악화	13
IV.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17
V. 글로벌 도전과 다자협력의 위기	18

제2장

동아시아 정세 전망

I. 미국	22
II. 중국	29
III. 일본	35
IV. 러시아	45
V. 동남아시아	53

제3장

북한정세 전망

I. 정치	66
II. 군사	69
III. 경제	72
IV. 대외정책	75
V. 대남정책	79

목차

2025년 안보정세전망

제4장

안보정세 종합평가

I. 세계정세	84
II. 동아시아정세	86
III. 북한정세	92

제5장

결론 및 대응 방안

I. 세계정세	96
II. 동아시아정세	98
III. 북한정세	107

요약본

요 약

I 세계정세

○ 트럼프 2기 출범과 인도-태평양 중심성 복귀

- 트럼프의 재선으로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중심성 회복
- 지정학적 연계성이 심화되며 중동과 유라시아에서의 위기가 인도-태평양으로 전환될 가능성
- 글로벌 사우스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증가하며 인도와 남태평양 도서국 등과의 협력 확대 예상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 러시아 승리 시 규칙 기반 질서 훼손 및 유엔의 기능 약화
- 소모전 지속 시 국제사회의 진영 대결 심화
-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나토의 방위비 분담 문제 및 우크라이나 지원 불확실성 확대
-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 초기 미국의 중재로 조기 휴전 가능성

○ 현실주의 강화와 군비 확장

- 2025년 현실주의 강화, 상대이익 기제 심화
- 핵 안보 강화와 군비 지출 확대, 해양 대리전 양상 심화
- 해양, 우주 등 공공재의 군사화가 안보 도전으로 이어질 전망

II | 동아시아정세

○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

- 트럼프 2기 행정부, 미국 우선 대외정책과 보호무역 강화
- 나토 동맹국 방위비 증액 요구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 확대

○ 미중갈등의 심화와 중국의 대응

- 시진핑의 권력공고화와 노선의 지속적 추진
- 미국의 강력한 압박하에 글로벌 사우스 협력과 다자외교 확대
- 중국특색적 현대화 추진을 위한 '새로운 질적 생산력'의 강력 추진

○ 일본의 군사 부문 역할 확대

- 일본은 미일 동맹을 강화하며 군사적 역할 확대 추진
- 통합작전사령부 창설로 미일 공동 대응 능력 강화
- 대만해협 및 동중국해에서의 군사적 긴장에 대응하기 위한 방공식별 구역(ADIZ) 운용 강화
- 자위대의 군사 능력 확대와 헌법 개정을 통한 국방군 보유 논의 지속

○ 러시아의 위협 증대

-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존재감을 유지하며 일본과의 영토 분쟁 지속
- 일본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비 증액 및 군사준비 태세 강화
- 러시아는 북러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시도

○ 동남아시아의 역할

-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중 갈등 상황 속에서 균형 외교를 추구하며 자국의 이익 보호
- ASEAN은 남중국해에서의 분쟁 완화를 위한 다자적 협력 강화
-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국가들은 국방력을 증강하며 지역 내 자주적 방어 능력 향상 도모

III | 북한정세

○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강화

-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무기 지원으로 북러 협력 강화
-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 강화 시도

○ 핵 개발 지속

- 북한의 전략적 핵무기 개발 포함 핵 개발 지속
-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에 핵 개발 협력 포함 예상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시나리오에 따라 북한의 핵 개발 전략 변화

○ 한반도 안보 정세

-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북미 정상 외교 재개 가능성
-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

IV 대응 방안

○ 세계정세

-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 증대에 따라 연계된 군사적 및 외교적 전략 필요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 따라 국제질서와 규칙 기반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 고려 필요

○ 동아시아정세

- 미중 갈등의 심화와 대만해협, 남중국해의 갈등 상황 주시 필요
- 한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 강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비한 공동 방어체제 구축 필요

○ 북한정세

- 북러 협력 강화에 따른 안보 위협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 북미 정상 외교와 이에 따른 한반도 긴장 완화 가능성

제1장

세계정세 전망

제1장 세계정세 전망

I 미중 패권경쟁과 세계질서의 재편

○ 인도-태평양 지역 지정학적 중심성 심화

- 트럼프 2기 출범으로 한층 강화된 대중국 견제는 인-태 지역을 국제 정치의 지리적·전략적 중심에 재배치
- 중동·유라시아에서 열전 형태로 진행되는 갈등이 점차 안정화되거나 이완되는 틈새 속에서, 인-태 지역은 지정학적 '중심축'으로의 복귀를 가속
- 이 지역은 미·중 간 군사적 긴장뿐 아니라 경제·기술·에너지 공급망 경쟁의 핵심 전장이 되며, 각국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 주도권, 우주 영역, 그리고 디지털 경제 규범 경쟁 등 다차원적 영역에서 경합
- 미 해군의 전력 증강과 군사전략 추진(프로젝트 33), 대만 주변 해역에서의 주권 수호를 명분 삼은 중국 해양전력 강화, 일본·호주·인도 등 역내 주요국의 해군력·우주력 증진 움직임이 상호작용하며 지정학적 긴장도 가중
- 인-태 지역 내 이념·체제 성격이 다른 국가 간 연대 및 연합 형성이 가속되고, 이로 인해 역내 안보협력체(예: 쿼드, AUKUS), 다자적 경제협정, 기술표준 선점 경쟁 등 다양한 형태로 질서 재편 현상 가시화

○ 글로벌 사우스의 전략적 가치 상승 및 준진영화 현상

- 글로벌 사우스는 기후변화·식량위기·보건안보 등 초국경적 이슈 해결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며, 기존 권력 질서 속에서 주변화되었던 국가들이 점차 국제정치의 영향력 행사자로 성장
- 인도와 남태평양 도서국들은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모두에게 전략적 가치를 가진 자원·영토·인구·공급망 거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한 외교적 지렛대 확보
-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기존 강대국 중심 국제규범을 재해석·재구성하려는 시도로, 환경·인권·식량·디지털 격차 해소 등 다층적 의제를 내세우며 국제협상력 강화
- 이러한 역동 속에서 글로벌 사우스 간 연대가 단순한 느슨한 협력을 넘어 준진영화로 진화, 장기적으로 미·중 패권 경쟁을 '양극 구도'에서 '다극 구도'로 변환시키는 촉매 역할 가능
- 그 결과, 2025년 이후 국제질서에서는 기존 양강 체제에 대한 대안적 축 형성 가능성이 점쳐지며, 이는 중견국, 신흥국 모두에게 새로운 외교적 기회 창출

○ 나토·유럽의 전략적 재정렬과 글로벌 차원 확대

- 나토는 2022년 마드리드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를 유럽 직접 위협, 중국을 체제적 도전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명확한 전략적 방향성 수립
- 미국은 나토를 유럽 전역 방위 기제로 한정하지 않고, 인-태 지역 안보와 연결된 범세계적 안보네트워크로 발전시키며, 이를 통해 국제질서 전반에 걸친 권위주의 도전 세력 견제

- 나토와 EU 협력은 기존 유럽 중심의 협력 범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관계 강화로 확대되며, 기후변화, 기술 표준, 신형안보 위협(사이버, 우주) 대응 등 다층적 프레임 구축
-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전략우선 순위 변화와 중국 부상을 감안, 자체 방위능력 강화 및 전략적 자율성 확대 모색, 동시에 미·유럽 동맹체제 내 책임 분담 구조 변화 압박에 직면
- 인-태 파트너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과 나토의 교류 증대는 유럽-아시아 간 안보 연계성을 증진, 이로써 기존 지역질서가 서로 다른 대륙 간 상호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재편

II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정세

○ 전황 변화와 다양한 시나리오 영향

- 2024년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를 장악한 상황에서, 트럼프 2기 출범은 종전 협상 모멘텀을 제공하지만 양측은 지리적·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 투쟁
- 시나리오 1: 러시아 승리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한다면 주권침탈과 같은 규칙기반 질서 와해라는 일탈 행위가 자국의 국익에 크게 기여했다는 판단을 할 것이기에 유엔 휘방을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음. 인-태지역 규칙기반 질서 수호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

- 시나리오 2: 러시아 패배
 - 러시아가 패배한다면 일시적으로 자자세 외교로 회귀하면서 규칙을 지키는 모양새를 취하겠지만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또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를 만들어내려고 할 수 있음. 인-태지역에서 무리한 현상변경 시도의 가능성도 낮아지는 선순환도 예상 가능
- 시나리오 3: 소모전 지속
 - 2025년에도 전쟁이 소모전 양상으로 지속된다면 러시아는 유엔에서 진영대결을 펼치며 러시아가 규정하는 유사입장국 연대 편외외교의 플랫폼으로 유엔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에 자유주의적 처방 전망은 밝지 않음. 인-태지역이 지정학적 중심으로 복귀하는 템포가 빨라질 수 있음
- 시나리오 1, 3의 경우 북한의 공식 핵보유국 지위 달성에 순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인-태지역의 핵 안보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 권위주의 세력 간 연계 심화

- 벨라루스, 이란, 북한 등은 러시아 전쟁 수행을 지속적으로 뒷받침, 무기·병력·기반시설 제공으로 전선 유지
- 북한군 파병은 러시아 측 병력 부족을 보완, 동시에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는 계기
- 중국은 러시아에 방위산업 기반 지원 및 이중 용도 물질 이전으로 러시아의 전쟁능력 강화, 유럽-대서양 안보 공동체 부담 증가
- 권위주의 국가들 간 상호 의존성 강화는 미·유럽 중심 질서에 대한 대안적 안보·경제·기술 블록 형성 시사

○ 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집단방위 재편

- 나토, 우크라이나에 수십억 유로 규모 장기 지원 통해 전력 증강 및 러시아 침략 억제 기반 마련
- NASTU 설립으로 우크라이나군과 나토 연계 강화, 전투력 현대화, 장기적 억지 효과 증대
- 유럽 전선에서 빈번한 대규모 연합훈련 실행, 전진 방어력 강화, 새로운 방위계획 하 병력·역량·자원 배치 최적화
- 향후 우크라이나 전후 질서 재편 과정에서 나토는 대리 억지력을 한층 강화하고, 나토-우크라이나 관계를 제도화하여 장기적 안정 확보

○ 트럼프 재집권 영향력 확대

- 트럼프의 조기 종전 구상(비무장지대 설정,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배제)은 러시아에게 유리한 지형 조성,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불확실성 심화
- 유럽 동맹국들은 미국의 전략적 판단 변화에 따른 불안감 고조, 군비 증가·자체 방위전략 수립 등 자구책 강구
- 미국-유럽 간 신뢰 훼손, 대서양관계 균열은 나토 내 권위 재조정, 방위비 분담·전략목표 합의 등 난제 초래
- 종전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영토 상실 및 안보공백 문제는 주변국 안보딜레마 확산, 유럽 안보 질서 장기적 불안정 요소로 작용

III 세계 안보 환경의 악화

○ 현실주의의 영향력 강화

-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중 2025년은 현실주의의 목소리가 강하게 작동될 것으로 예상
- 현실주의 역학이 더 거세게 가동된다는 의미는 국제질서에 상대이익 기제가 더 심화된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자유주의 역학이 나뉘어 작동한다면 절대이익 기제의 공간도 마련된다는 의미
- 2024년은 국제정치에서 현실주의가 압도한 한해였는데 이러한 기조를 변화시킬 자유주의적 처방이 2025년에 가동될 여지는 많지 않을 것임
- 2024년에는 기존의 자유주의 처방이 약화되거나 사라지는 도전에 직면했는데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핵방으로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이 활동 정지하는 등 유엔의 무력화 현상이 대표적
- 자유주의 처방의 가장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을 한 유엔이 그 기능이 약화되는 기조는 2025년에도 지속될 전망
- 가장 큰 이유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행태를 변화시킬 추동체가 2025년에도 마련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현실주의의 처방 가속화로 인한 파급효과

- 2025년 국제 공공재 기능이 더 약화될 전망
- 역내 국가는 해양, 우주 등 공공재 공간이 빠르게 군사화되면서 싸워서 쟁탈해야 하는 기제의 부상으로 안보 도전으로 심화될 전망
- 특히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에서 '자유의 항행작전 vs. 항행 거부작전' 방식으로 해양 대리전 양상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보임

- 트럼프의 대중국전제 강화뿐 아니라 보편관세 정책으로 보호무역 기제가 부상하는 가운데 경제안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정책이 2025년에도 집중 조명될 전망
- 다만 이러한 상대이익 기제 심화의 환경속에서도 하위정치 의제를 중심으로 절대이익 기제는 낮은 강도 수준이나마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기후변화, 보건 등 글로벌 차원의 도전 협력은 전 인류적 차원의 문제 해결 자체를 위해서뿐 아니라 이를 계기로 상위정치 협력이라는 선순환의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협력은 있을 것으로 예상
- 특히 기후 협력의 계기는 글로벌 사우스의 지도국으로 나서고 싶어 하는 브라질이 2025년 11월 유엔 기후변화회의(UNFCCC COP 30)를 주최하면서 중요한 모멘텀이 조성될 전망
- 따라서 인-태지역에서 하위정치 의제를 잘 발굴해서 이를 위기관리로 활용하는 것이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해질 전망

○ 역내 긴장 수위를 높일 중국

- 트럼프 2기의 대중국전제 정책은 경제 분야를 넘어 군사 분야로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
-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중국은 핵심 영역에서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과정에서 군사적·전략적 선택지가 탈회색지대화 기조로 점차 변화될 것으로 전망
-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는 기존의 회색지대전략을 어느 정도 유지하겠지만 대만해협에서는 회색지대전략과 흑백지대전략을 혼용하되 후자의 비중을 점차 높이는 방식으로 전략적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미국도 역내 해양통제를 유지하게 위한 필사의 노력을 전개할 것으로 보임
-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자면 다음과 같음

○ 역내 대리전 기제의 화약고로 부상할 대만해협

- 2025년에도 대만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는 인도-태평양지역의 긴장은 지속될 전망
- 대만해협은 미 해군이 2027년 중국의 대만점령 시나리오 현실화시 이를 효과적으로 맞서 승리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겠다는 작전지침-“프로젝트 33(Project 33)”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대리전 기제가 가속될 전망
- 2025년은 이 작전지침을 이행에 옮기는 원년의 성격이 있기에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더 심화될 수 있음
- 2024년 10월 14일 중국은 ‘연합리젠-2024B 연습’이라는 이름으로 대만 포위작전을 실시하며 합동전력을 투사했는데 2025년에는 대만 포위 무력전개가 더 빈번해질 수도 있음
- 다만 트럼프 2기의 대만정책이 모호한 바 불확실성이 큰 상태로 상당기간 현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음

○ 해양통제 주도권 장악 경쟁의 가늠자가 될 남중국해

- 남중국해는 중국이 추진하는 해양 영향력 확보 목적에 가장 근접한 영역이라는 특성이 있는 바 2025년에는 남중국해 내해화 달성의 최종 승부수로 규정하여 해양공세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 실제로 중국이 남중국해 내해화를 완성했다고 판단하여 동일한 공식을 서해에 적용하려 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인-태의 타지역으로 위기 확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 특히 중국은 이미 서해 내해화의 여건조성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한국은 서둘러 효과적인 방책을 마련하기에 2025년이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음

○ 유사한 수준의 군사적 긴장이 유지될 동중국해

- 동중국해에서 방공식별구역(ADIZ) 둘러싼 긴장이 더욱 심화되고 일본-중국 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대치가 단지 수사적 위협을 넘어 해양전력 간 대결 구도로 그 기제가 변화될 가능성도 있음
- 항공기 및 함정 간 일촉즉발의 상황이 잦아질 수 있으므로 해양신뢰 구축조치(MCBM: Maritim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계기도 부상할 것으로 전망
- 이 과정에서 동중국해의 전반적 긴장 수위는 현 수준 유지 예상

○ 유럽 안보 지형 장기적 불안정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국경 주변지역(조지아, 몰도바, 발칸 서부), 러시아 영향력 강화 시도
- 나토는 대공미사일 방어체계(IAMD), 탄도미사일 방어(BMD), 그리고 핵억지력 유지로 대응
-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아시아 집중 경향 속 스스로의 방위능력 강화 및 전략적 자율성 확보 노력
- 이는 유럽 내 분담구조 변화, EU 공동방위 정책 강화, 프랑스·독일 등 핵심국가 주도의 유럽 방위전략 재정립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유럽 내부에서도 미묘한 힘의 재분배 발생

IV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 보호무역주의 기조 고착화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 기타 경쟁국에 대한 보편관세·비관세 장벽 강화, 경제 디커플링(de-coupling) 가속
- 핵심광물·첨단반도체·희토류 등 전략자원 확보전 치열, 기술패권 쟁탈전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심화
- 각국은 경제안보(경제적 국익과 안보 이해를 결합한 전략) 강조, 국내 산업 보호·육성정책 채택, 무역파트너 다변화 추진

○ 미-유럽-아시아 간 경제질서 재조정

- 미국, 아시아 동맹국(일본, 한국, 호주)과 경제·기술협력으로 중국 의존도 낮추고 역내 복합공급망 구축 시도
- 유럽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 가능성, 보호무역 강화 흐름 속에서 자국 산업경쟁력 제고·유럽 내 대체 공급망 발굴·EU 산업정책 강화를 통한 대응책 마련
- 아시아 국가들, 미·중 양강 사이에서 '경제적 줄타기' 시도: 특정 산업분야에서 미국과 협력, 다른 분야는 중국과 협력하는 전략적 다변화 추진

○ 글로벌 가치사슬(GVC) 블록화 경향

- 국가별·지역별 블록화로 인해 다양한 미니레터럴 경제협정, 기술동맹 등장
- 탈세계화(de-globalization) 경향 가속: 민족주의적 경제정책, 자급자족형 공급망 구축 시도 증가

- 스타트업 및 혁신기업들은 기술 선도권 쟁탈전 속에 특정 진영 내 네트워크 편입 유인, 규범·표준 경쟁 심화
- 개발도상국·신흥국, 글로벌 사우스와 연대해 경제적 자립성 제고 노력, 대체 금융·무역 플랫폼 개발로 서방 주도 금융체제 대안적 구성 시도

V 글로벌 도전과 다자협력의 위기

○ 다자거버넌스 기능 약화와 부분적 협력 유지

- 권위주의 국가들이 유엔, 세계은행, IMF, WTO 등 기존 다자기구에서 합의 도출 방해, 규범 이행 저지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합의 어려워짐
- 기후변화, 보건, 식량안보, 재난대응 등 인류 공동문제 영역에서는 국가이익 초월한 협력 필요성 존재
- 브라질 COP30 등 기후외교 계기, 글로벌 사우스 리더십 강화, 미국·유럽·중국 모두 기후이슈에서 최소한의 타협 모색
- 백신 공급, 전염병 대응 협력 등 보건영역에서 하위정치 의제 중심의 제한적 협력 가능성 유지, 이를 통한 상호 신뢰 축적 모색

○ 나토-EU 및 역외 파트너 협력 확장 시도

- 나토와 EU의 전략적 파트너십 심화: 사이버 방어 협력, 우주영역 상호 지원, 탄력적 공급망 구축 등 다양한 안보 프레임 개발
- 나토,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와의 안보대화 확대, 인-태 지역 안보 아젠다에 서방 참여 확대

- 비(非)EU 유럽 국가들도 방위·기술 협력 참여 확대를 통해 다자협력 네트워크 다변화, 개방적 지역안보 체계 확립 시도

○ 동맹 갈등 및 불확실성 증대 속 제한적 협력 추구

- 트럼프 재집권으로 미국-유럽 간 갈등: 우크라이나 종전 방식, 나토 개혁 방향, 방위비 분담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서 대립각 형성
- 유럽 동맹국들, 미국의 아시아 전략 집중 속 유럽 방위자립 고려, 나토 내 발언권 강화 노력, 미국은 동맹국 비용부담 확대 요구 지속
- 이 과정에서 전통적 동맹체제는 유연화·재조정, 부분적 갈등 관리와 제한적 협력이 공존
- 글로벌 차원에서 국가들은 완전한 대립이나 완전한 협력 대신, 부분적 협력과 경쟁이 혼재하는 복합적 질서를 맞이
- 결국 2025년 국제사회는 긴장, 갈등, 선택적 협력, 가치 대립이 얽힌 복잡한 동태 속에서 새로운 안정점 탐색이라는 도전에 직면하며, 이 과정에서 다층적 이슈, 다양한 행위자, 복합적 이해관계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장(場)으로 진화

제2장

동아시아정세 전망

제2장 동아시아정세 전망

I 미국

1. 정치: 공화당 단점 정부와 불안한 리더십

○ 미국 정치의 보수화로 인한 공화당 단점 정부의 탄생

- 지난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 승리
- 대통령의 아젠다를 뒷받침해 줄 의회권력을 동시에 석권함으로써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 발휘 가능
- 미국은 하원에서 예산편성권을 상원에서 광범위한 인사승인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의회의 도움 없이 정권을 유지하기 어려움

○ 공화당의 불안한 우위

- 오랜만의 공화당 단점 정부에도 불구하고 상하 양원 모두 불안한 우위 유지
- 상원의 경우 51석 과반에 52석, 하원의 경우 218석 과반에 219석 확보하여 불안한 우위를 유지
- 미국 정치 문화 특성 상 민주당과 공화당의 교차 투표 현상이 활발히 발생하는 관계로 언제든지 의외의 결과 발생 가능

○ **트럼프 정부의 조기 레임덕 가능성**

- 트럼프의 이례적인 집권 2기 출범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치의 양극화로 조기에 부정적 여론 형성 가능성
- 트럼프 정부의 경우 다음 임기 도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조기 레임덕 발생 가능
- 공화당과 미국 보수세력에 강력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새로 선출된 상원의원들의 경우 임기가 6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보다 길기 때문에 독립적 투표 경향이 강한 미국의 상원에서 반란표 발생 가능성이 높음

2. 외교: 미국우선의 공세적 대외정책○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 ‘미국우선 대외정책 (American First Foreign Policy)’을 공세적으로 추진**

- 트럼프의 캠페인 슬로건 -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경험을 토대로 2기 주요 정책성과를 달성할 것
- ‘미국우선 대외정책’의 강화와 재활성화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이익을 담보

○ **공세적인 대(對)중국 견제와 대만의 전략적 활용**

- 대중(對中) 상대적 우위의 군사·안보 분야는 양국 간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은 자제하고 역내 안보협력 강화, 군사혁신 및 군사기술 개발 등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중·장기적인 경쟁에 대비

- 대만 해협 혹은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인해 트럼프 2기 행정부 하 미국이 중국과 심각한 군사적 충돌을 감수할 가능성은 희박
- 전쟁을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불필요한 행위로 인식하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
- 대만 해협 혹은 남중국해에서 미중 양국 간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군사 당국 간 소통 등을 통해 갈등 가능성 통제
- 대만 문제 관련해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모호하게 유지하며 양국 관계를 관리
-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등을 통해 중국 견제를 위한 대만의 전략적 활용 지속

○ 북미 간 정상외교를 통해 양국 간 교착 상태가 해소

- 2023년 11월 27일 북한은 김성 주유엔북한대사를 통해 미국이 대화를 원한다면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
-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캠페인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
- 트럼프 1기에서 김정은과의 만남을 위해 북한이 제시했던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요구를 수용
- 트럼프 2기 행정부 하 북미 정상 간 회동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을 것으로 예상
- 노벨평화상 도전에 대한 의지로 북미 정상외교의 재개 통한 북미 관계의 개선 및 한반도 긴장 완화 시도 가능성

3. 경제: 관세 장벽과 전략적 디커플링

○ ‘보편적인 기준 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s)’와 ‘트럼프 상호 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 등 관세 장벽 활용

- ‘미국 노동자를 위한 공정 무역(Fair Trade for the American Worker)’
-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인 기준 관세 적극 추진
- 무역수지 적자가 크고 미국 내 정치적 상징성이 큰 철강, 자동차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
- 특히 자동차 산업 분야는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규모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무역 분야 협정을 ‘환태평양 동반자협정(TPP) 2’라고 지칭하며 취임과 더불어 IPEF 폐기 공언
- 세금 감면과 청정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근간으로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개편 예고
- IRA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행정부의 권한을 활용하여 IRA의 기존 규정들을 일부 무력화하거나,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는 등, 미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운용할 가능성
- 미국 내 사업 파트너,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지역의 공화당 연방의회 의원 및 공화당 주(state) 정부 등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필요

-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의 ‘전략적 디커플링 (selective decoupling)’과 ‘2차 미중 무역 전쟁’**
 -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되찾고 제조업 강국으로 재부상한다는 주장을 토대로 ‘4개년 국가 리쇼어링 계획’을 추진
 - 철강, 전자, 의약품, 첨단기술 등을 중심으로 중국이 배제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작업
 - ‘보편적인 기준 관세’와 ‘트럼프 상호 무역법’ 등 관세계획은 대중(對中) 무역수지 적자 감소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
 - 중국의 최혜국대우 철회, 미국 기업의 중국 내 투자 및 중국의 미국 자산 구매 금지 등의 조치와 더불어 중국의 강한 반발 예상
 - 무역 분야 전반에 걸친 미중 간 갈등은 ‘2차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이어지며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4. 동맹: 거래 중심적 동맹과 전략적 선택

- **‘거래 중심적 동맹관’과 ‘미국우선 통상정책’에 기초한 공세적 한미 관계**
 - 거래 중심적인 동맹관으로 방위비 분담금, 한미 연합군사 훈련,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동맹운용의 경제적 측면 부각
 -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협상을 요청할 가능성
 - 통상 정책은 ‘보편적인 기준 관세’와 ‘트럼프 상호 무역법’ 등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보호무역주의 기조
 - 무역수지 적자 감소를 위한 정치적 노력으로 동맹과 비동맹의 구분

이 없을 것이며, 무역 흑자국인 한국의 대미 수출 무역장벽도 높아질 가능성

○ ‘전략적 선택과 집중’ 및 ‘거래 중심적 동맹관’의 강화

- ‘세계화의 거부와 애국심의 포용(Reject Globalism and Embrace Patriotism)’
- 세계경찰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추구할 것
-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
-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끝내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 중단 등을 협박
- 현재의 전황(러시아의 우크라이나 4개 지역 병합 등)을 인정하며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
- NATO 동맹과의 관계도 상당한 변화 가능성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더불어 NATO 동맹들에게 청구서를 들이댈 것으로 예상
-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유럽의 방위는 NATO 동맹국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지라고 압박할 가능성
- 중동 정세와 관련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아브라함 협정 2.0’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
- 이란을 상대로는 바이든 정부의 나약함을 비판하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책임을 전가
-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아브라함 협정 2.0’을 추구하며 중동의 세력균형 재편을 시도

5. 기후·에너지: 화석연료의 확대와 에너지 보조금 축소

○ 기후변화 및 친환경 에너지 정책 반대 및 화석연료의 공급 확대

- ‘에너지 지배력의 발휘(Unleash Energy Dominance)’
- 미국 내 에너지 자원 생산의 족쇄를 풀고, 휘발유, 경유, 천연가스 가격을 낮추어 전 세계에 걸쳐 에너지 안보를 촉진
- 미국이 외국의 에너지 공급 업체에 의존 탈피 유도
- 화석연료와 친환경 에너지 모두에 대한 미국 내 투자 생산을 확충하여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접근성을 보장
- 태양열, 풍력 등 고비용의 친환경 에너지 개발보다는 셰일 오일 생산 확대, 석유 업체에 대한 규제 및 세금 완화, 전략 비축유 추가 확보 등 화석연료 개발 촉진 기조
-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로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규제완화예상

○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지급 축소, 폐지

- 재생 에너지 등 특정 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축소하고, 민간 에너지의 혁신을 가속하며, 석유, 천연가스 등 미국 내 시추를 허용
-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뉴딜을 제거하고, 전기자동차 전환 정책을 끝내며, 파리 협약에서 재탈퇴 공언
- 전기자동차 세제 혜택을 과거 수준으로 되돌리고, 환경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신규 자동차 생산의 54%를 전기자동차로 충당할 것을 의무화하는 환경보호국(EPA)의 정책을 폐지
- 풍력 발전 보조금 지급 종료와 더불어 화석 연료 사용 제품들에 대한

규제를 폐지 예고

-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 배출량 감축 정책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폐기될 가능성

II 중국

1. 정치: 시진핑 1인집권체제 및 노선 공고화의 지속적 추진

○ 시진핑 1인집권체제 공고화의 지속과 강화

- 권력적 측면에서 시진핑은 집권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권력의 공고화가 더 한층 강화되면서 사회주의 이념에 기반한 생산력 발전의 노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 최고 권력기구로서 2027년 가을 까지 임기가 보장된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의 시진핑에 대한 충성도 역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임.
- 권력 공고화의 강화에 따라 일부 충성도가 높은 간부에 대한 시진핑의 신임이 증진되면서 특정인에게 일정정도 무게감이 실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특정인의 권력적 지위가 드러나게 높아지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
- 차이치(蔡奇) 중앙판공청 주임이나, 허리핑(何立峰) 부총리와 같은 충성과 보좌진에 대한 신임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함께 권력 공고화에 따른 자신감을 바탕으로 최고위층 간부들에게 권한을 일정 정도 배분할 가능성도 있음

- 시진핑은 2023년 당중앙 금융위 주임을 리창(李強) 총리에게 이양한 바 있으며, 이전까지 당중앙에 설립된 다양한 위원회 조직의 책임자를 시진핑이 직접 맡아왔던 추세와 달리 권한 배분을 통해 부담을 줄이는 상황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나, 해당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상황이 나빠질 경우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음
- 기존의 정치적 관례에 대한 파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시진핑에 대한 이상화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음.
- 이와 더불어, 4연임을 향한 시진핑의 행보가 지속되면서, 건강 이상설이나 권력누수설 등과 같은 권력 이상설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시진핑 노선의 지속적 추진

-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생산력이론의 새로운 발전으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신질생산력(新質生產力)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강대국을 지향하는 노선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임
- 이미 생겨나기 시작한 군의 ‘신질전투력(新質戰鬥力)’과 공안의 ‘신질공안 전투력(新質公安戰鬥力)’이란 구호와 같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신질생산력의 개념이 확대될 것이며, 이를 통해 이념적 지향성을 사회 전반으로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음
- 다만 이러한 이념적 지향성이 현실과 다소 유리되면서 사회주의의 정치적 올바름에 매몰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면서 단발적 사고나 대중시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 또한, 신질생산력이 지향하는 바가 풍부한 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산업에 대한

지원이 야기하는 산업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2. 외교: 미국의 견제와 압박의 증대와 중국특색 대국외교의 추진

○ 트럼프 2기의 시작과 함께 미중 경쟁의 심화 발생

- 트럼프는 선거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강한 견제와 압박을 시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중 경쟁이 극도로 심화될 것임
- 특히 트럼프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성과를 중요시함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에 대한 관세 60% 부과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미중 관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됨
- 바이든과 비교해 볼 때, 일부 영역에서 강한 압박을 가하는 이른바 Small Yard, Big fence와 달리 전방위적인 영역에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는 Big Yard, Big fence가 전개되면서 미중 경쟁의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바이든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전개해 왔던 방식과 달리, 트럼프는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이 확실하며,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과 동맹국들 간의 균열을 파고들어 동맹관계의 이완을 유도함으로써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음
- 다른 한편으로, 바이든이 안보적 측면을 중시하면서 전략적, 경제적 압박을 추진해 왔던 것과 달리, 트럼프는 경제적 측면을 중시함으로 인해, 만약 경제와 무역에서 일정한 타협이 이루어질 경우 미중 사이의 경쟁이 보다 완화된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글로벌 사우스 협력과 다자외교의 확대

- 심화되는 미중 경쟁에 대한 대응으로서 중국은 아시아 및 아프리카, 남미 등의 개발도상국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글로벌 사우스 외교가 중국외교의 중요한 영역으로 부상할 것임
- 이와 함께 글로벌 사우스와의 다자협력 및 브릭스, 상하이 협력조직, 등 다자외교를 중국외교의 중요한 통로로 활용할 것임
- 이와 같은 글로벌 사우스 협력과 다자외교의 확대는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화 이니셔티브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진행될 것임
- 트럼프의 미국제일주의 및 이에 따른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은 자유무역주의와 개방성을 중시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대하고, 이를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인식적 도구로 활용할 것임

3. 군사: 군사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국방력의 강화

○ 군사개혁의 지속적 추진

- 국가전략에서의 신질 생산력의 개념 제기와 더불어 국방 분야에서의 신질 전투력에 입각한 국방 및 군사력 건설의 정책적 방향과 교리의 심화가 추진될 것임
- 또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시진핑 강군 사상관철, 신시대 군사전략 방침 관철,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 영도 견지, 중앙군위주식 책임제 관철, 건군 백주년 분투목표 실현을 위한 난관 돌파가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임

- 신질 전투력 개념의 심화와 더불어 신흥영역(新興領域)의 전략 능력이 국가 안보 및 군사 투쟁의 주도성과 관련된 것임을 강조하면서 해양,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 등의 혁신과 활용을 추진
- 구체적으로 해상 군사투쟁 준비와 해양 권익 수호 및 해양 경제 발전의 동시 고려, 해양 활용 능력 제고, 우주 배치 최적화 및 우주 체계 건설 추진, 사이버 공간의 방어 체계 구축 및 국가 사이버 안보 수호 능력 제고, 인공지능 과학기술의 중요 프로젝트 총괄 실시 강화 및 선진적 성과의 응용력 확대가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임

○ 군사영역의 문제발생에 대한 보완작업 강화

- 부패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군부 고위층에 대한 단속강화, 당적박탈, 처벌 등이 진행되면서 군부의 불만이 내재되어 있음으로 인해, 이에 대한 완화의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시진핑이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올해 발생한 핵무기 보존상태 및 군사기밀의 누설과 같은 문제에 대한 대응이 강도높게 진행될 것임

4. 경제: 신질 생산력에 입각한 과학기술 및 경제성장의 추진 강화

○ 현대화 목표의 달성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 2013년 18기 3중전회에서는 2020년까지 결정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공표한 데 반해, 2024년 20기 3중전회에서 5년 후인 2029년까지 「결정」에서 제시한 개혁과제를 완성하겠다고 공표하였음에 근거해

볼 때, 과학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 전략의 지속적 강화 추진이 예상된다

- ‘새로운 질적 생산력’이 새로운 발전방식이자 동력으로 강조됨에 따라, 핵심·전략 분야에 대한 국가자원 집중과 기술혁신, 생산요소의 최적 배치, 산업고도화 관련 각종 정책이 전 지역 및 산업에서 추진 될 전망
- 새로운 동력을 우선 발전시키면서 낙후·과잉 생산능력을 점진적으로 제거하여 안정적인 산업 변혁을 질서 있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자 간의 속도조절의 모순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함

○ 전면적 혁신

- 글로벌 수준의 기술·응용 혁신 및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추진함에 있어 과학기술체제 혁신과 함께 국가전략 분야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 대학교육 중심의 교육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합 추진
-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 고품질 발전 촉진, 전면적 혁신 지원 시스템 구축, 거시경제 거버넌스 개선, 도농 융합발전, 개방, 법치강화, 문화 시스템 개혁, 민생 개선, 생태환경 개혁강화, 국가안보 등과 같은 개혁과제에 대한 정책적 추진 강화
- ‘고품질 발전’과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质生产力)’추진을 위해, 거국 체제를 바탕으로 국가자원을 총력적 동원하면서 공급망 경쟁력 및 경제안보를 강화

Ⅲ | 일본

1. 정치 : 일본정치의 유동화

○ 이시바내각의 출범

- 계속 낮은 내각지지율에 시달리던 기시다는 결국 2024년 8월 14일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월에 실시되는 자민당총재선거에 입후보 하지 않겠다고 표명
- 2024년 9월 27일 치러진 자민당총재선거에서 오랫동안 비주류에 머물러 왔던 이시바 시게루는 정치파티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문제로 주류파벌들이 해산된 특수한 상황 속에서 8명의 다른 후보를 누르고 총재로 당선됨
- 2024년 10월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취임 당일 가진 최초의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내각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면서 10월 9일 중의원을 해산. 10월 27일 총선거를 치르겠다고 표명

○ 10.27 총선거의 결과

- 자민당본부가 비자금 조성문제를 이유로 공천을 하지 않은 후보가 지부장을 하고 있는 지부에 대해서도 2,000만엔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안 그래도 역풍이 불고 있는 자민당 후보들에게 결정타가 됨
- 10월 27일 치러진 총선거에서 연립여당은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2009년 총선거 이래 처음으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는 참패를 기록

- 2024년 11월 11일 치러진 총리지명선거에서는 30년만에 1차투표에서 1, 2위를 한 이시바 총리와 입헌민주당의 노다 대표에 의한 결선투표가 행해졌으며, 결선투표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221표, 노다 대표가 160표, 무효표가 84표로 이시바가 다시 총리로 선출됨

○ 단명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이시바내각

- 1994년 4월 소수여당으로 출범한 하타내각이 내각불신임안 가결이 확실해지자 2개월만에 총사직을 택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소수여당은 언제라도 총사직의 궁지에 몰릴 수 있음
- 게다가 오랫동안 자민당내에서 비주류에 머물러 있던 이시바는 당내 기반이 너무나 취약. 취약한 당내기반을 대중적 인기로 만회한 고이즈미 준이치로와 같은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지도 않음
- 2025년 7월에 참의원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이시바내각이 아무리 길게 가도 이 참의원선거 이전에 끝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음. 이번 총선거에서 선거의 얼굴로서 바람을 일으키지 못한 것이 분명한 이상, 참의원선거 이전에 새로운 인물로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봄
- 물론 그 이전에도 결정적인 정책의 실패나 각료의 불상사 등을 계기로 내각불신임안이 제출되어 가결될 경우 총사직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음

○ 유동적인 향후의 일본정치

- 다만 현재와 같은 정치세력의 분포가 지속된다면, 설령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다시 내부 분열 등에 의해 단명정권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일부에서는 자민당이 자민당 출신의 총리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일부 야당에게 총리 자리를 양보함으로써 연립정권에 끌어들여 정권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음
- 다만 야당의 경우도 연립정권에 선불리 가담했다가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약화시켜 기존의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에 연립정권에 참여하는 것이 쉬운 선택은 아님
- 결국 큰 정계개편이 이루어져서 진정한 2대 정당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일본정치는 상당한 유동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음

2. 외교 : 이시바외교의 이상과 현실

○ 이시바 총리의 외교·안보정책 구상

- 이시바 총리는 주일미군기지의 관리권을 일본으로 이관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즉 자위대의 기지내에 미군을 게스트로서 받아들인다면 기지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대응을 일본정부가 담당하게 된다는 것. 예를 들어 미군 가테나기지를 항공자위대 가테나기지로 변경하고, 미군이 함께 주둔하는 것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현재의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아시아”라고 지적하며 아시아판 NATO의 창설을 주장. 아시아에 NATO와 같은 집단적 자위체제가 없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기 쉬운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을 서방동맹국이 억제하고 위해서는 아시아판 NATO의 창설이 불가결하다고 주장
- 최근 북리가 군사동맹을 맺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강화되고 있고, 여기에 중국의 전략핵이 더해지면 미국의 이 지역에서의 확장

억제는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 따라서 아시아판 NATO를 만들고 미국과의 핵공유나 핵반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헌법9조 2항을 삭제하고 “내각총리대신을 최고지휘관으로 하는 국방군을 보유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 2012년의 자민당 헌법초안을 출발점으로 하여 헌법9조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 이시바 구상의 실현은 전도다난

- 2024년 11월 5일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있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주일미군기지와 관련한 이시바 총리의 구상이 실현되기는 더욱 요원하게 되었음
- 일본의 방위비는 2022년 12월 기사다내각에 의해 GDP의 2%까지 증액되는 것이 결정되었으나, 트럼프는 더욱 증액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음
- 또한 트럼프에게는 “미국이 동맹국을 지켜준다면, 동맹국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발상이 있어서, 주일미군 주둔경비의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아시아판 NATO 구상에 대해서도, 중국을 공통의 위협이라고 설정한다고 가정할 경우, 각국의 입장 차이가 커서 아시아판 NATO를 성립시킬 정도로 공통된 위협인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3. 군사 : '보통국가' 일본으로의 시동

○ 통합작전사령부의 창설과 미일동맹의 강화

- 2025년 봄에 통합작전사령부가 창설될 예정인데, 통합작전사령부가 창설되면 평소부터 육·해·공 자위대에 의한 통합작전, 영역횡단작전의 능력을 연마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통합운용의 실효성이 향상되고, 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처나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됨
- 또한 현재는 일본의 통합막료장이 미국측의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의 양자와 각각 조정하고 있지만, 통합작전사령부와 통합작전사령관이 신설되면, 작전에 관계되는 미군과의 조정을 보다 긴밀하게 행하여, 미일공동대처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됨
- 2024년 7월 29일 개최된 미일 외교·국방장관회담(2+2)에서 미국측은 평시 및 긴급사태에 있어서의 상호운용성 및 미일간의 공동활동에 관계되는 협력의 심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주일미군을 인도태평양군사령관 예하의 통합군사령부로서 재구성할 의도가 있음을 밝히며, 이 재구성된 주일미군이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의 중요한 카운터파트가 될 것이라고 함

○ 반격능력 정비의 현황과 전망

- 2023년 12월 15일 당시의 기하라 미노루 방위대신은 기자회견에서 사정거리를 1000킬로미터 이상으로 증가시킨 '12식식대함유도탄'의 개량형에 대하여 배치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2026년도부터로터 1년 앞당길 것을 표명
- 2024년 8월 30일 방위성은 2025년도 예산안의 개산(概算)요구를 발표. 반격능력을 행사하는 데에 필수적인 정보수집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수의 소형위성으로 표적을 추적하는 ‘위성 콘스텔레이션’ 구축에 3232억엔을 계상, ‘스탠드·오프 방위능력’ 향상에 9700억엔을 계상. ‘위성 콘스텔레이션’은 동일한 궤도상에 다수의 소형화상위성을 띄워, 계속적으로 목표를 탐지·추미(追尾)하는 반격능력의 ‘눈’이 되는데, 6년간의 계획으로서 민간에 위탁하여, 2025년도에 발사를 시작하여 2027년도부터 운용을 개시할 전망

- 잔존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플랫폼(지상, 함정, 항공기)로부터 발사할 수 있도록 12식 지대함유도탄능력향상형(지상발사형, 함정발사형, 항공기발사형)의 개발을 계속 진행함
- 2023년도부터 착수한 도서방위용 고속활공탄(능력향상형)의 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2023년도부터 극초음속 유도탄의 연구를 시작하여, 2024년도부터 조기의 양산취득을 위하여 제조태세의 확충에 착수하는 등, 각종 유도탄의 장사정화를 꾀하고 있음
- 국산 스탠드·오프 미사일의 필요한 수량을 갖추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국제 토마호크를 조기에 취득. 당초에는 2026년도와 2027년도에 블록V를 최대 400발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더욱 엄혹해진 안보환경을 감안하여 일부의 블록V를 블록IV로 변경하여 2025년도부터 도입함과 아울러, 토마호크 발사기능을 함정에 설치하고, 요원을 교육시킬 계획

4. 경제 : 엔저의 지속

○ 엔저와 일본경제

- 엔저의 요인으로는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경쟁력의 저하가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는 장기 트렌드 요인에 의한 엔저압력, 2022년 이후의 FRB 등의 금리인상에 의한 일본과의 금리차이의 확대, 강한 미국경제가 초래하는 달러 강세 현상이 있음
- 향후에도 일본경제가 안고 있는 불안요소 때문에 엔저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즉 일본은, 장래에 대한 불안에 의해 소비자나 국내투자의 모멘텀이 약하고,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으며, 인구 감소도 있어서 잠재적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금리인상의 여지가 제한적. 또한 거액의 공적채무잔고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에 급속한 금리인상은 어려움
- 앞으로 가령 인플레이율이 과거 수십년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정착되는 시대가 도래하여, 주요국의 장기금리도 종래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경우, 일본이 여전히 크게 금리인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시장의 엔에 대한 기대에도 구조적인 영향을 미쳐, 지금까지 보다도 더 엔저가 정착될 가능성도 있음

○ 트럼프의 재등장과 일본경제 전망

- 트럼프는 수입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10%에서 20%까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와 같은 보호주의에 의해 일본도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수출품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관세율의 인상, 확장적인 재정운영 등에 의해 인플레가 발생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인플레 경향이 있게 되면,

FRB는 결국 금리인하를 추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미국의 장기금리는 높은 수준에 머무르게 됨.

- 그 경우 미일 금리차의 확대가 예상되어 엔저가 진전되며 수입물가의 상승에 의해 일본 역시 인플레이가 촉진됨. 2024년 봄의 춘투에서 명목임금이 크게 증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 때문에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졌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2025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음.

5. 우리에게 주는 기회요인

○ 극우파 정치인이 총리가 될 가능성이 낮아짐

- 총선거에서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이 과반수를 얻지 못하게 됨으로써 2024년 11월 11일 출범한 제2차 이시바내각은 소수여당으로 출발
- 자민당내에는 다카이치 사나에와 같은 극우파 정치인들이 있으며, 다카이치의 경우 2024년 9월 27일 행해진 자민당총재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는 1위를 하고도 결선투표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를 당함
- 그런데 이제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이 소수여당이 되어, 야당의 견제가 강해졌으므로 다카이치와 같은 극우파 정치인이 총리가 될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할 수 있음

○ 엔저의 지속에 의해 일본의 산업경쟁력은 저하

- 아베노믹스에 대해 비판하는 많은 학자들은 아베노믹스가 의도적으로 엔저를 유지시켜 일본의 수출경쟁력을 높였지만, 그 때문에 일본이 구조조정에 실패하여 산업경쟁력이 저하되었다고 지적

- 이와 같은 논리에 입각하면, 앞으로도 엔저가 지속될 경우 일본의 산업경쟁력은 좀처럼 회복하기 힘들게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우리의 산업경쟁력은 더욱 높아지게 됨

6. 우리에게 주는 도전요인

○ 약체내각과의 외교가 가지는 문제

- 현재 이시바내각은 단명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고 있으며, 야당으로의 정권교체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이므로, 이시바내각과의 외교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음

○ 엔저의 지속에 따른 일본의 강한 수출경쟁력

- 장기적으로 보면 엔저에 안주할 경우 산업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엔저에 의해 일본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은 강해짐
- 엔저가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정부와 기업은 대책을 강구해야 함

7. 우리의 대응 방안

○ 이시바내각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

- 이시바내각의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일본 정치구도를 보면 야당의 결집에 의한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는 쉽지 않으며, 자민당이 중심이 된 소수여당이 계속 유지되거나, 새로운 야당을 연립에 참가시켜 소수여당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음
- 설령 이시바내각이 단명으로 끝난다고 해도 여전히 자민당 중심의 연립정권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이시바내각과 계속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향후 건설적인 한일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

○ 입헌민주당을 비롯한 주요 야당들과의 관계 강화

- 다만 현재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야당으로의 정권교체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요 야당들과의 관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입헌민주당 대표인 노다 요시히코 등과 같이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계속 접촉면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

- 일본의 방위력 증강이 우리에게 위협요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일본의 증강된 방위력을 한미일 안보협력의 자산으로 만드는 것
-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2023년도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의해 본격화된 한미일 안보협력이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는데,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트럼프 차기 대통령을 잘 설득할 필요가 있음

IV 러시아

1. 정치: 푸틴 대통령 장기 집권 체제 구축

- 2024년 3월 푸틴 대통령은 87.28%의 역대급 득표율로 5선에 성공 및 최근까지도 84%~87%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 및 2025년에도 유사한 수준의 지지율 유지 등 정권 공고화

구 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지지율(%)	85	87	87	87	85	84	87

- 현 제8대 국회(입법부) 정당별 분포 및 사법부의 친정부 여당 충성도 고려시 사실상 입법-사법-행정이 결합된 unify system 확립 등 푸틴 대통령 장기 집권 및 특별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 2025년 9월 예정된 제9대 국회의원 선거는 향후 푸틴 대통령의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집권 여당의 의석 점유율(72.2%) 및 지지율(36%±) 고려시 과반 의석 달성 유력

계	통합러시아당	공산당	정의당	자민당	새로운 사람들	무소속
450(석)	325	57	28	23	16	1
점유(%)	72.2	12.7	6.2	5.1	3.6	0.2

- 한편,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 관련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특별군사작전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75%(24. 9월) → 76%(24. 9월) → 76%(24. 10월) 등 압도적 다수가 전쟁을 지지

- 단, △ 젠더별 지지율을 보면, 남성의 경우 82%가, 여성 응답자 72%가 전쟁을 지지, △ 세대의 경우 18-24세 (57%), 25-39세 (63%), 40-54세(78%), 55세 이상 (81%) 등 젠더 및 세대 간 전쟁에 대한 관점 상이
- 러시아 대선 결과 및 푸틴 대통령의 지난 6개월 간의 평균 지지율 (86%) 고려시 2025년에도 유사한 수준의 지지율이 예상되며, 국내·외 주요 정책 수행 동력 확보는 물론 특별군사작전을 수행한 정치적 기반 구축
- 특히 특별군사작전에 대해 국민적 지지가 75%를 상회하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전장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민적 차원의 전쟁 지지는 2025년에도 유효할 것으로 전망
 - 단, 최근 전쟁 지속 보다 평화협상을 선호하는 러시아 국민 여론 증가 추세 고려시 평화협상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압도적 지지 가능성

구 분	9월	10월	11월
전쟁지속	39%	36%	35%
평화협상	54%	55%	57%

- 결과적으로 푸틴 대통령은 특별군사작전 및 특별군사작전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견인하기 위해 승리를 통한 전쟁 종식 및 전방위 보훈 정책을 통해 국가 통합 모색
- 상기 국내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9대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부 여당의 압승 유도 등 특별군사작전 장기화 대비 유리한 환경 조성

2. 외교: 중러 전략적 협력 및 러북 동맹 발전

- 푸틴 대통령은 올해 5선 취임 이후 해외 첫 순방지로 중국을 방문 시진핑 주석과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의 심화·발전에 합의
 -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단독·확대 정상회담, 공식·비공식 친교 활동 및 하얼빈 공대 방문 등 밀도 높은 일정을 진행했으며, 시진핑 주석도 12시간 밀착 동행 등 인간적인 유대감과 정치적 결속력 부각
 - 한편, 중러 정상은 공동성명을 채택, 정치·경제·군사·인공지능(AI)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발전하는 데 합의하는 등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를 질적으로 격상
 - 공동성명에 “미국과 그 동맹국의 군사적 위협 행동(military intimidation)과 북한과의 대결을 유발하는 무장 충돌 도발로 한반도 정세의 긴장 격화에 반대한다”고 적시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견제 및 북한에 대한 지지 의지 과시
- 푸틴 대통령은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등 1996년 폐기된 조소 동맹 조약(1961년 체결) 복원 등 사실상 동맹 관계 구축
 - 특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제4조는 사실상 자동개입을 특정한 것으로 동맹 관계를 지향
- 러시아는 2024년 9개 국가 체제로 출범한 브릭스-플러스 성공적 개최로 G7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안 체제 확립 가능성을 국제사회의 과시
 -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경제 5개국이 주축인 비공식 대화협의체로, 2024년 1월부터 이집트,

-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 신규 가입으로 9개국으로 확대
 - 2023년 기준 브릭스 9개 회원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44.8%를 차지하며, GDP(PPP) 규모는 전 세계의 35.8% 점유
 - 이번 회의를 계기로 파트너국 (partner countries) 지위를 도입해 13개국에 파트너국* 자격을 부여해 외연 확장 움직임 강화
 - * 튀르키예,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알제리, 나이지리아, 우간다, 볼리비아, 쿠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 특히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중 브릭스 국가가 7개국으로 확대되고, △아세안(ASEAN, 10개국) 회원국 중 4개국이 브릭스에 참여
- 러시아는 2025년, 중국과의 전방위 협력을 통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대응하고, 북한과의 군사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지속 강화해 특별군사작전 장기화 및 향후 평화협상에서 유리한 위치 확보 모색
- 특히 북한군 파병 및 재래식 무기와 탄약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는 북한에 ICBM 대기권 재진입, SLBM 사출능력, 군사정찰위성 고도화 등에 필요한 핵심 군사기술 이전 가능성 증대
- 한편, G7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의 전략적 연대 강화, 회원국 확대 모색,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 등 브릭스-플러스 정상회의의 질적·양적 발전 추구
- 특히 2025년 전승절 제80주년 대규모 열병식 계기 승리 선언 및 글로벌 사우스 등 권위주의 진영과의 결속력 강화로 고립 탈피 시도
- 이 외에도 특별군사작전 기간 느슨해진 CIS에 대한 영향력 복원을 위해 CIS (독립국가연합), SCO (상하이협력기구), CSTO (집단안보조약기구) 등 역내 다자협의체에 대한 정치·외교적 결속력을 지속 강화 추진

3. 군사: 특별군사작전 조기 종식을 위한 군사적 노력 강화

- 2024년 11월 현재 러시아는 루한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우크라이나 4개주 병합 및 군사적으로 통제 및 관리 중
- 우크라이나군은 2024년 8월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를 기습 침공해 현재 약 500~600㎢ 상당의 러시아 영토를 점령 중
 - 러시아군은 지난 9월부터 쿠르스크 영토 탈환 작전을 본격화했으며, 북한군 1차 파병 병력 중 일부가 쿠르스크에 참전하는 등 미 대선 이후 쿠르스크 공세 강화 중

〈그림 1〉 우크라이나 전쟁 전선 상황 변화



- 미 대선에서 이후 전쟁 조기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이견*으로 합의에 난항이 예상되는 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 힘에 의한 방법으로 평화협상 여건 조성 전망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철군이 평화협상의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러시아는 점령 중인 영토는 평화협상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입장
 -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평화협상 강제를 위해 전력수요가 많은 동계 작전 기간 발전소 및 지역단위 소규모 변전시설에 대한 무차별적 타격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총체적 전쟁 수행 의지 무력화 추구

- 한편, 러시아 당국은 기존 90만 명 규모의 러시아군 편제를 150만 명으로 확대하는 대통령령을 발령해 기존 대비 약 67% 편제를 증가한 만큼 2025년 신규 병력 동원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할 것으로 전망
 - 러시아군 당국은 나토의 확장 및 바그너 그룹 등 군사반란 등에 대비 2024년 모스크바 및 레닌그라드 군관구 등 작전사령부를 신편
 - 상기 2개 군관구 정상화를 위한 조직 최적화, 인력확보, 전·평시 작전계획 수립 및 대비태세 확립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추진 전망
- 러시아는 특별군사작전 장기화 및 전투원의 생존성 보장을 위해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이용을 확장해 전투원을 대체하는 드론 및 무인체계의 기하급수적 생산에 국가 방산능력을 결집할 것으로 관측

4. 기회 및 위기 요인

【기회요인】

- (정치) 푸틴 대통령 5선 성공 및 높은 지지율, 2025년 총선에서 집권 여당 과반 의석 확보 가능성 등 전쟁 지속을 위해 정책 동력 수단 확보
- (경제) 전시 경제 운용을 통해 실질임금상승률 향상 및 내년도 경제성장률 1.7% 수준의 경제회복 토대 마련
- (외교) 중국과 인도, 이란 및 북한 등 권위주의 진영은 물론 글로벌 사우스와의 결속력 강화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나토 확장에 대응여력 확보

- (군사) 트럼프 공화당 후보 당선 계기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기대감 상승 및 북한군 참전으로 전쟁 장기화 대비

【위기요인】

- (정치) 푸틴 대통령 집권 장기화로 정치 피로감 증대, 대안 정치 세력 부재 및 시민 사회 발전 저해 등 사회 역동성 감소
- (경제) 노동 가용성 및 생산능력 감소 등 공급 측면의 제약 요인 심화로 성장률 하방 위험 증대
- (외교) 권위주의 진영과의 결속력 강화로 민주주의 진영과의 관계 단절 등 고립 심화
- (군사) 전쟁 장기화로 노동 생산성 감소 및 공급 왜곡 등 사회 발전의 불균형 초래 및 러시아 사회의 병영 국가화 등 전쟁 비용부담 심화

5. 우리의 대응 방향: 북러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를 고려 단계적 대응 조치 모색

-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군사 물자의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으로 이어진 상황은 한국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인 만큼 러북 군사협력의 실질적인 진전 추이를 고려한 단계적 대응조치 필요
 - 우리 정부는 ‘전훈 분석’ 기능을 포함한 범정부 모니터링단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해 러북 군사협력의 실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수집을 통해 우리의 단계적 대응조치에 필요한 의사결정에 조력 제공

- 트럼프 2기 인사 및 미 의회와 전방위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적극 대응
 - 특히 트럼프 2기 출범과 무관하게 한미 간 연합방위태세 공고화 및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여건 조성으로 대북 억제력 확립
- 한중 간 정상외교, 외교·안보 차원의 교류협력 활성화로 북한군 추가 파병 및 파병 장기화 억제를 위한 전방위 대중 외교 전개
 - 내년도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외교·안보 분야에서 다양한 부대 활동 전개, 국제사회에 북한군 파병의 부당성 적극 홍보 등 국제여론 조성
- 현 상황에서 한러 관계 복원은 적절치 않으나 러북 밀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통을 통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관계 복원을 위한 선제적 준비
 - 외교·안보 당국 간 실무급 협의체 운영 및 Track 2.0에서 한러 간 교류협력 및 소통 지속

V 동남아시아

1. 정세 개관: 동남아시아에서 멀어지는 미국과 리더십의 공백

-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함에 따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리더십을 회복하고 중국과의 힘의 균형을 맞춰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 더불어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리더십은 급격히 하락해질 전망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미·중 경쟁 그 자체는 전방위적으로 확대·심화될 것이 분명한바, 남중국해에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 무역과 공급망에서의 경제적 불안정성, 기후·에너지·식량 등 글로벌 과제에 대한 협력 약화는 이 지역 국가들에게 더 큰 위기로 다가올 것임
 - 결국, 2025년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트럼프의 귀환으로 한동안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로 양쪽으로부터 이익을 확보해왔던 아세안 국가들도 각자 이해관계를 계산하고 입장을 다시 정리할 것으로 보임
- 냉전 종식 후 동남아시아가 미국에 가졌던 ‘의지에 대한 불신’은 트럼프 1기에서 더욱 증폭되었고,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해소되지 못했을뿐더러 이 지역에 대한 관여를 단지 미·중 전략 경쟁을 위한 지정학적 발판과 수단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의 ‘의지에 대한 불신’은 ‘의도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음
 - 2024년 발표된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ISEAS-Yusof Ishak Institute)의 여론 조사 중 ‘미·중 사이에서의 선택’의 문항에서 중국이 1%라는 근소한 차이지만 조사가 시작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앞선 것이 이러한 동남아의 인식을 반영함

-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미국 신행정부의 정책에 따른 미국의 리더십 붕괴는 그것이 설령 완만히 이루어지더라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이들 국가들의 선호가 중국에 치우치도록 할 수 있음
 - 지난 바이든 행정부 시기를 돌아보면 중국 역시 이 시기 동남아시아와 아세안에 새롭게 제시한 비전이나 관여 정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음
 - 단지 역외 균형자로서 미국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이 지역에 대한 안보·경제 관여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중국에 대한 선호가 올라간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동남아시아가 외교 정책 의제에서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이 지역에 대한 트럼프의 개인적 무관심과 다자주의에 대한 회의론을 고려할 때 아세안 정상회의 불참과 동남아시아 지도자들과의 직접적인 관여를 거의 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됨으로써 동남아시아의 대미 신뢰도는 크게 약화될 것임
-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선호’가 아닌 ‘신뢰’에 있어 이 지역 국가들이 미국보다 중국을 더 신뢰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중국이 향후 남중국해와 대만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여전히 이 지역 국가들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의존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임
 - 반면 중국의 공세와 영향력이 확대된다고 해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능력과 의지를 가진 소수 동맹국을 중심으로 안보, 과학기술, 경제 등 전략적 협력에 치중할 경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러한 미국에 전적으로 편승할 가능성도 낮음

- 따라서 이 지역 국가들에게 가장 합리적 선택은 아세안 자체의 회복력과 중심성을 강화하는 것이 될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2025년 동남아시아 지역은 미·중 패권경쟁과 중국의 공세성 심화 속에서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강화하고 역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세안 차원의 노력에 치중하는 가운데, 아세안 국가들이 지속 직면하는 남중국해와 다양한 해양안보 이슈, 그리고 최근 지속되는 정치적 불안정성과 권위주의 확산 등이 중첩되어 도전적 요인이 될 전망이다
 - 특히 2024년 아세안 의장국을 맡은 라오스의 역량과 리더십의 한계로 해당 이슈들에 대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함에 따라 2025년 의장국인 말레이시아는 역내 문제를 보다 실효성 있게 해결하고자 할 것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미얀마 문제에 있어 군부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등 지역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단합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세안의 경제적 역할과 무역 관계를 우선시하는 말레이시아의 성향 및 브릭스 가입 결정 등으로 인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관대한 접근 방식을 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
- 트럼프 하의 미국이 이 지역에 대한 관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세안은 지역 자체의 회복력(resilience)과 단결력(unity)를 통해 아세안 중심성을 높이는 것을 2025년 최고의 과제이자 목표로 추진할 것임
 -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중국, 러시아 정상뿐만 아니라

미국도 2023년, 2024년 연이어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EAS의 적실성과 동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1기에서도 참가하지 않던 트럼프가 2025년 회의에 참가할 가능성은 더욱 낮음

- 이는 트럼프가 이 지역 국가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거래적 이익과 전략적 중요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동 회의에서 남중국해, 첨단 기술 등 강대국 경쟁에 대한 핵심 현안이 논의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임
- 대통령 취임 첫 해 아세안 회의체 참석은 신임 행정부가 이 지역에 얼마만큼의 관여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지만, 2025년에도 미국이 아세안과의 양자 정상회의를 개최하거나 EAS에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중국은 기존대로 총리가 참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세안 중심성을 강화시키고 강대국 경쟁에서 오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은 미·중이 아닌 중견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더욱 공을 들일 가능성이 있음

2. 정치·외교: 각자도생 속 헤징 전략 강화

○ **확고한 미국의 리더십이 없는 상황에서 미·중 간의 경제·전략적 충돌은 동남아시아에서 더욱 치명적일 수 있음**

- 아세안 중심성 약화와 미·중 경쟁의 심화,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주장과 공세성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미국의 지역 관여 감소를 이용해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높이려 시도할 것임

- 특히 새로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 지역에서 어떠한 안보전략을 추진할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2025년 전략적 중립입장과 모호성을 견지하고 미·중 모두와 협력적 관계를 추구하면서 양쪽으로부터 정치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헤징 전략을 강하게 구사할 것으로 전망됨
 - 아세안의 제도적 차원에서도, 미국과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친밀도 및 경제관계가 매우 높은 말레이시아가 2025년 의장국을 수임하면서 중국의 역내 영향력 장악 거부와 미국의 인태전략에 대한 긍정적 자세를 동시에 유지하는 전략적 균형과 헤징을 추구할 것으로 보임
- 동시에 전체로서의 아세안이 미·중 경쟁 속에서 무기력한 대응력을 보이고 중심성을 잃어감에 따라 개별 국가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양 강대국에 대해 사안별로 헤징과 관여를 선택적으로 구사할 것임
- 베트남은 2023년 연말 미국과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를 수립하였으나 2024년부터 중국과의 관계 강화해오고 있음
- 2024년 6월 중국 리창 총리와 회견한 자리에서 “베트남-중국 장기 우호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베트남 대외정책의 객관적 요구이고 전략적 선택이며 최우선”이며, “베트남-중국 운명공동체 건설이 보다 풍부한 성과를 이룩하도록 추동할 의지가 있음”을 표명한 바 있음
 - 또한 국가 서열 1위인 또 럽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2024년 8월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만나 양국 관계 강화를 약속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트럼프가 대미 흑자 교역국인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관세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2025년 베트남은 중국과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관계를 확대

하면서 남중국해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으로 보임

- 2024년 10월 취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역시 인도네시아의 비동맹 정책을 활용하여 미국과 중국의 패권적 이해관계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미묘한 외교 정책 방향을 취할 가능성이 높음
 - 프라보워는 취임 전 이전 정부의 국방부장관으로서 호주와 방위 협정을 체결한 직후, 2025년에 중국과 양자 군사 훈련을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음
 - 그는 2024년 3월, 대통령 당선 열흘 만에 시진핑 중국 주석의 초청을 받아 국방부장관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과 양국 협력 관계를 논의하였으며, 7월 31일에는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군사협력 현황과 양국관계 발전을 협의하였음
 - 특히 10월 20일 취임 후 첫 해외 방문 일정으로 중국을 택하고, 양국이 갈등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나투나 해역에서 어업과 석유·가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는 등 프라보워 리더십 하의 인도네시아는 2025년 강대국을 더 활발하게 오가며 실리를 추구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인권 문제로 인해 받았던 미국 입국 금지 조치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해제된 프라보워는 ‘인도네시아 트럼프’라는 별명에 걸맞는 강력한 리더십 스타일로 인해 트럼프와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됨. 인도네시아 경제가 다른 아세안 국가들보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낮아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점도 양국 관계가 강화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임
- 미국과 동맹관계는 아니지만 이 지역 핵심 파트너인 싱가포르는 2024년 9월 중국과 양국 훈련 중 가장 큰 범위의 포괄적 훈련을 실시하면서 향후 방위 관계를 강화할 것임을 밝힌 바 있음

- 1990년 국교 정상화 이후 싱가포르는 미·중 간 국방 관계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미국 신행정부가 미·중 관계에서 일방 선택을 강요하는 형태로 대외정책을 구사할 경우 새로운 총리하에 미·중 사이에서의 실리적, 균형적 안보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임
- 필리핀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확실한 균형전략을 취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성에 따라 잃을 수 있는 것이 매우 많은 국가임.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트럼프 당선 이후 미필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잘 이행될 것”이고,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 밝힌 바 있음
 - 트럼프의 대중 군사견제 정책에서도 필리핀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낮게 평가되지 않을 것이며, 마르코스 대통령과 바이든이 구축한 동맹 관계 강화 기조는 큰 틀에서는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임
 - 그러나 필리핀 신규 미군기지에 대한 인프라 건설, 막대한 규모의 군사원조, 이에 수반되는 경제지원 등 필리핀에 대한 관여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전반적 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개별 국가 차원에서 미·중에 대해 선택적으로 균형, 관여, 해징을 적절히 구사한다는 것은 결국 아세안을 통해 단결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세안 중심성은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3. 경제: 트럼프 2.0 리스크를 기회로 전환할 준비 가속화

○ 동남아시아 지역(아세안 10개국과 동티모르)은 2024년 4.6%, 2025년 4.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경색된 통화 환경에도 불구하고 수출, 안정적인 물가, 관광 증가에 따른 서비스업 호조가 동남아시아 경제를 계속 견인해왔다고 평가하면서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양호한 민간소비, 정부지출, 외국인투자 등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2025년 성장률을 4.7%로 전망했음

〈그림〉 2025년 동남아시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지역	KIEP [2024.11]		IMF [2024.11]		Oxford Economics [2024.10]		S&P Global [2024.10]		ADB [2024.9]	
	2024	2025	2024	2025	2024	2025	2024	2025	2024	2025
인도네시아	5.1	5.1	5.0	5.1	5.1	5.0	5.1	5.1	5.0	5.0
말레이시아	4.4	4.5	4.8	4.4	4.5	4.0	4.7	4.5	4.5	4.6
필리핀	5.8	5.9	5.8	6.1	5.8	5.9	5.7	5.9	6.0	6.2
태국	2.4	2.9	2.8	3.0	2.5	3.0	2.7	3.3	2.3	2.7
베트남	6.3	6.5	6.1	6.1	6.7*	6.5*	6.2	6.4	6.0	6.2
ASEAN 5	4.6	4.7	4.5	4.5	-	-	-	-	-	-

주 1) [] 안은 전망치 발표 시점

2) *는 2024년 9월 전망치임

○ 그러나 2025년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미·중 갈등 및 대외 리스크 향방에 영향을 받을 것임

- 무역은 트럼프 2.0 하에서 동남아시아의 경제 복지에 대한 위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분야임. 트럼프는 이미 동남아시아 7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없앨 것을 언급했으며 동남아시아에서 경제 관여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의지는 더욱 약화될 것임

- 더욱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불렀던 관세가 향후 이 지역에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임. 모든 수입품에 10~20%,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은 글로벌 무역과 성장에 차질을 일으켜 수십 년 동안 동남아시아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 온 규칙 기반의 국제 무역 시스템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임
 - 물론, 트럼프 1기에서 벌어진 미중 무역 전쟁시 기업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트럼프의 관세 인상을 피하기 위해 공급망을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전환하여 이 지역이 수혜를 받은 부분도 간과할 수 없음
 - 따라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1기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정책을 리스크가 아닌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출 것임
-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단계적인 보호무역조치를 시행하면서 추가적인 대응 관세 인상과 이에 따른 전면적인 무역전쟁 등 글로벌 성장과 투자, 교역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 트럼프가 공언한대로 대중 관세율을 더 높게 설정하고 동맹국을 포함한 광범위한 수입 규제가 도입되면 중국 및 주요국들의 보복조치로 세계 교역이 급락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것인바,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들은 금융불안과 함께 성장률이 하락하고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음
 - 특히 동남아시아는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한 허브이자 국제 무역의 주요 플레이어이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해외 투자처로 미중 전략적 경쟁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트럼프 2기에서 예상되는 정책 변화로 인해 이 지역이 큰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전망임

- 보다 구체적으로는, 말레이시아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인해 ‘중국+1’ 생산기지로서 주목받으며 해외직접투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GDP 대비 교역 비중이 132%(2023년 기준)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정학적 갈등 고조와 이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 심화 등이 2025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
- 이는 중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 인도네시아 역시 유사함. 특히 프라보워 신임 대통령이 국내 복지예산을 대폭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4년과 비슷한 5.1% 수준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됨
- 태국은 2024년 8월 세타 타위신 총리 해임, 패통탄 친나왓 신임 총리 임명 등 정치 불안정 요인으로 대내외 우려가 높아진 상황임. 그럼에도 태국의 주요 산업인 관광 서비스업 성장, 양호한 민간소비 등으로 2025년 경제성장률은 2.9%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무역과 개방적 통상에 의존하는 싱가포르는 미중 무역 전쟁 격화를 가장 우려하는 국가중 하나임. 싱가포르는 잠재적인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에 직면하여 다자 무역 질서를 선호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들과 협력할 방법을 고안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 증가, 견고한 수출, 내수 개선에 힘입어 2024년 7%, 2025년 6.5% 성장하여 동남아시아 6대 경제국 중 가장 높은 GDP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대미 흑자 교역국인 베트남에 대한 관세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수출 위주의 베트남 경제에 위협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2020년 트럼프는 베트남이 1년 간 700억 달러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외환시장 개입률도 5%에 달해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여 통상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올린 바 있음
- 그럼에도 안정적 대내 경제여건, 수해 복구를 위한 공공투자와 이의 승수효과, FDI 유입 및 수출수요 회복 등에 따라 베트남의 성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제3장

북한정세 전망

제3장 북한정세 전망

I 정치

○ 2024년 김정은의 40세와 리더십 강화

- 2024년은 김정은이 40세가 된 해로, 김정은은 이를 계기로 민생 안정과 국제 교류에서의 성과를 강조하며 자신의 리더십을 강화함
- 김일성의 112주년 기념행사는 축소된 반면, 김정은의 업적과 국가 발전 전략에 초점을 맞춘 행사들이 대대적으로 진행됨. 이러한 전환은 김정은의 리더십을 절대화하려는 의도와 맞닿아 있음

○ 김일성의 상징 축소와 김정은 중심 강화

- 특히, 2024년에 김일성 생일을 의미하던 ‘태양절’ 명칭이 사라지고, ‘4.15경축’, ‘4월의 봄 명절’ 등으로 변경. 이는 김일성의 상징적 영향력을 줄이고 김정은의 권위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됨
- 김일성 생일의 명칭 변화는 북한 내부의 문화적 변화뿐 아니라, 남북한 간의 문화적 분리와 갈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함
- 김정은은 김일성의 상징을 전유하며 자신의 정치 체제를 강화하고, 선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자 함. 김정은을 ‘주체조선의 태양’으로 부르며, 김정은의 절대 권위를 구축하는 작업이 지속될 전망

○ 외교 및 친선 활동의 확대

- 김일성 생일 주간의 주요 행사는 축소되었지만, 대신 외교적 퍼포먼

스와 친선 활동이 확대됨. 김정은의 위상을 강조하는 외교적 행보가 이어졌으며,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주체사상 국제 토론회를 개최해 김정은의 국제적 이미지를 구축함

- ‘조종친선의 해’ 기념행사가 김일성 생일 기간에 개최되었으며, 기존의 김일성 중심 축제에서 벗어나 김정은의 외교적 성과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됨

○ 정상국가 이미지 구축 지속

- 2025년에도 김정은 정권은 북한을 정상 국가로서 국제 사회에 위치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2025년에도 역시 김일성 생일을 김정은의 정치적 체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하며,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외교적 이미지 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 김정은은 러시아는 물론이거니와 과거 및 현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외교적 범위를 확장하여 북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전망이다

○ 국내 민생 개선 및 정치 체제 강화

- 2024년 ‘지방발전 20×10 정책’을 통해 지방 공업을 활성화하고 수해복구 사업 등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했음. 김정은은 자신의 정당성 강화를 위해 특히 민생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민의 지지를 얻고자 함
- 대규모 준공식과 기념공연을 통해 김정은의 업적을 스펙터클하게 선전하고, 김정은을 ‘친근한 아버지’로 강조하며 주민들 사이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짐

○ 대남 선전 강화와 대내적 결속 유도

- 김정은은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내적 선전을 강화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유도하고 있음
- 2025년 북한은 남한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남한의 정치적 상황과 군사적 동향을 계속 비판하며 이와 병행하여 대내적으로 위기감을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은 이를 통해 내부의 경제적 어려움과 민심 동요를 억제하려는 전략을 지속할 가능성이 큼

○ 2025년 북한에서의 김정은 권위 강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정리하면, 2025년 북한은 김정은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김일성의 상징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치 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이를 통해 김정은 체제의 독립성을 부각하고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뚜렷함
- 경제적 어려움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은 보다 적극적으로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
- 내부적으로 민생 개선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고, 외부적으로는 정상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됨

II 군사

○ 핵 능력 고도화 및 다각화

- 북한은 2025년에도 핵 능력 고도화 목표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전술핵 및 전략핵 개발을 계속 추진하며, 핵투발 수단의 다양화와 현대화를 중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 핵사용을 위한 정찰 능력 확보를 위해 정찰용 무인기 및 인공위성 개발 계획 지속

○ 전술핵 개발 및 운용 전략

- 전술핵무기 개발을 통해 남한의 군사력 구조를 붕괴시키기 위한 군사훈련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북한은 이러한 핵 능력 강화를 통해 선제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음
- 북한 전술핵무기의 저위력 사용으로 핵무기 사용 문턱이 낮아질 위험이 존재함. 북한의 전술핵 운용은 한반도 위기관리 및 대북 억제에 큰 도전이 될 수 있음

○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구조 변화

- 북한의 전술핵 개발은 동북아 안보 구조를 북한에게 유리하게 조성하려는 시도로 평가됨
- 북한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거나 고조시켜 남한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할 수 있음
-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북한의 핵 군비 통제 및 군축 협상에 대한 대비가 중요함

○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 2024년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파병을 기점으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심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핵 및 미사일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 급진전에 따른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 대비해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을 더욱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은 러시아로부터의 군사 지원을 바탕으로 군사력 현대화 및 전술핵 활용 전략을 계속 발전시킬 것임

○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한 군사적 이득

- 북한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현대전에 필요한 전술 및 전략을 익히며, 새로운 무기체계 운용법도 학습할 것임
- 이는 드론 등 저비용 고효율 무기체계 운용과 관련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며, 실질적인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특히, 러시아는 북한에 전술핵, 방공망 등 군사 기술 및 무기체계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

○ 북러 군사 협력의 장기화 가능성

- 북한과 러시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상호 군사 협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으며, 핵기술과 군사 장비를 확보하려 할 것임
- 북한의 군사적 위상이 강화되면서 러시아와의 협력은 한반도 안보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남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전략 강화

-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에 기반한 남북 대결 구도에 적합한 군사력 및 핵 태세 발전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됨
-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남한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예컨대, 무력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 있음
-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이슈를 둘러싸고 남북한 간의 긴장 고조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큼

○ 북미 군축 논의 및 북한의 반응

-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2025년 트럼프 (2차) 임기 초기 북미 간 군축 혹은 군비통제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은 군축 협상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영구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큼
-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 정부는 미국과 협력하여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억제는 물론이거니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III 경제

○ 북한 경제의 구조적 문제 지속

- 대북 제재와 코로나 봉쇄의 영향이 여전히 깊이 남아 있어 경제 회복이 상당히 지체되고 있음
- 경제 회복을 위한 대외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으며, 특히 제재 완화 가능성이 낮아 지속적인 경제 발전은 요원한 상황

○ 대외 교역의 한계

- 2022년 이후 대외 교역이 재개되었으나, 이후의 교역 규모는 대북 제재로 힘들었던 2019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그나마 중국과의 교역량은 이전에 비해 조금씩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며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중국과의 교역 역시 대폭적인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임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파병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교역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환율 불안정과 거시경제적 혼란

- 2023년 하반기부터 환율이 급등하며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이 증가함
- 경제주체들 간 외환 확보 경쟁이 심화되며, 이는 북한 경제 전반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 북러 관계의 급진전으로 루블화 결제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일반 주민들의 루블화 사용은 매우 한정적일 것으로 예상됨

○ 북한 당국의 선택과 경제 통제 강화

- 김정은은 집권 후 현 시기 북한에서의 시장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시장을 억압하기보다는 시장 요소를 활용한 경제 운용을 해왔음
- 그러나 최근 들어 김정은은 “자본주의 요소를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시장경제 활동의 확장을 억제하고, 국가 주도의 경제 통제 강화를 시도하고 있음

○ 내부 경제 불안정성 심화

-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대북 경제제재의 여파로 국영기업을 포함한 공식 경제 부문에서도 자원의 고갈로 인해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음
- 이러한 불안정성은 북한 당국의 경제 통제가 쉽지 않음을 보여줌

○ 러시아로부터의 경제 지원은 제한적

- 2023년부터 본격화된 러시아와의 협력은 특히 2024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함으로써 더욱 심화되어 북한 경제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러시아로부터 에너지와 식량 등 일부 자원 제공이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의 협력은 아님
- 북러 협력은 주로 단기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보기는 어려움

○ 식량 및 에너지 자원의 부족 문제

- 2020~22년 코로나 시기 이후 식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아직까지는 대량 아사를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지만 북한에서의 여전한 경제적 결핍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 식량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 경제 회복은 어려우며, 이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다만 원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은 북러 관계의 급진전으로 말미암아 러시아로부터의 지원을 통해 어느 정도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단기적 경제 전망

- 2025년에도 경제 성장률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의 GDP 성장률 3.1%는 기저효과에 불과함
- 경제 회복세는 매우 더디며, 제재와 내부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운 상황
- 비핵화와 개혁개방 없이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 발전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군 파병 결정으로 북러 협력 외에 다른 추가적 국제적인 차원의 대북 경제지원 또는 경제협력 가능성은 매우 적어짐
- 또한, 북러 관계의 급진전을 중국이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관건임.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북한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에 그치게 되면 북한의 경제 상황은 매우 큰 어려움에 놓일 수 있음

○ 미래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 경제적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 당국의 통제력 약화와 내부 혼란 가능성이 있음

- 2025년에도 경제 회복이 아닌 생존을 위한 경제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 없이는 경제적 도약이 어려운 실정임

IV 대외정책

○ 북러 신조약의 의미

-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19일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음
- 북한은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효과를 제한적으로 만들고, 군사력 및 대외전략을 강화하고자 함
- 북러 신조약 7조에는 국제 및 지역 기구 가입에 대한 상호 협조와 지지가 명기되어 있으며, 이는 북한이 BRICS나 SCO에 가입을 요구할 때 러시아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함
- 러시아와 북한은 러북 신조약에서 평화적 핵협력을 약속하며, 이는 국제 비확산체제를 위협할 수 있음

○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 북한은 2024년 11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파병함
- 러시아가 북한에 파병을 요청한 이유 중 하나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감안, 전쟁이 조기 종결될 경우를 상정한 것임
- 북한은 북러 신조약 4조를 근거로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진격을 명분 삼아 참전 결정

- 북러 신조약의 발효 직후 북한군의 파병이 이루어짐으로써 양국 간 자동 개입 조항이 실제로 작동함을 보여줌

○ 북한군 참전의 국제정치적 파급 효과

- 북한군의 참전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이 국제전으로 변질되며, 세계 3차 대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
- 북한이 러시아가 구축하는 유라시아 안보 구조의 핵심 국가가 될 가능성 높아짐
- 러시아가 북한에 새로운 외교적 공간을 제공할 경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할 우려가 있음
-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파병으로 향후 한반도가 냉전적 갈등의 최전선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음

○ 북중러 전략적 삼각관계의 재편 가능성

-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은 북중러 삼각관계를 재편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의 압박이 분산되는 효과를 누렸지만 북한의 파병으로 인해 부담이 커짐. 예컨대, 북러 간의 초밀착으로 인해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북러의 긴밀한 관계가 오히려 중국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음
- 중국이 북중러 밀착을 견제하기 위해 한중 관계 개선이나 대북 압박을 선택할 가능성이 주목됨

○ 트럼프 당선과 대북 영향

-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며 글로벌

전략 환경에 큰 변화 예상

- 트럼프 행정부는 가치와 규범 기반의 외교 대신, 미국의 국익과 영향력 확장 중심의 외교전략을 채택할 전망
-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와 관계에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접근할 가능성 있음

○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

- 트럼프는 대선 기간 중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재차 활용하며 김정은과의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음. 트럼프는 집권 초기부터 정치적 효용성을 고려해 북한과의 관계를 주목할 가능성이 높음
- 트럼프와 김정은은 서로의 의중을 파악하려는 동기가 존재하며, 이는 2025년 상반기 중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음
- 반면,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는 핵능력 증강에 치중하고, 미국과의 대화는 후순위로 미룰 가능성도 있음
-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개인적 친분을 활용하여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화하고자 할 것임
- 협상을 통해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원하지만 트럼프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즉, 북미 대화는 가능하겠지만 핵 군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상 타협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미중 전략경쟁과 북한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는 북한에게 전략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트럼프 2기 동안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한층 심화되는 경우 북한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미중 갈등 속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려 할 것임
-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압박이 북한의 외교적 선택지와 협력의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북한의 대외전략 유연성 확장 가능성

-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미중 갈등을 활용해 북중, 북러 밀착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력을 극복하려 할 수도 있음
- 북한은 현재의 북중러 3국 관계 상황을 탈냉전 이후 가장 유리한 국제정치적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음
- 북한은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냉전적 갈등 구조가 형성될 경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수 있음

○ 신냉전 체제 규정 속 대남 적대 인식 심화

- 북한은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을 NATO와 같은 군사 블록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신냉전체제”로 규정함
- 이러한 위협 인식은 대남 적대적 정책의 배경이 되며, 남북 관계를 군사적 긴장과 대립 구조로 몰아가기 위한 조치이기도 함
- 북한은 신냉전 체제 속에 한반도를 위치 지으면서 이를 통해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갈등 구조를 심화하고자 함

V 대남정책

○ 대남 적대적 관계의 공식화

- 2023년 1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가 관계”라고 선언함
- 또한 김정은은 통일·동족·화해의 개념을 제거하라고 지시하며, 남북 관계를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고착하고자 함
- 이와 함께 김정은은 남북 간의 교류와 관련된 상징물의 철거를 명령,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과 같은 통일 관련 상징물을 철거함
- 대남 적대적 관계의 공식화에 따라 남북 간의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한반도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음

○ 남북 대화 채널의 단절

- 적대적 두 국가관계 선언 이후 북한은 남북 협력과 대화의 기구들을 해체하면서 남북 대화의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함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같은 남북대화 관련 부서들이 폐지되었는데 이는 남북 대화 자체를 시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함
- 남북 관계를 협력이 아닌 대결의 영역으로 설정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은 적어도 단기적 관점에서는 낮아질 수밖에 없음

○ 민족적 동질성 부정

- 북한은 남한과의 민족적 동질성을 부정하고, 남한을 한 민족이 아닌 적대적인 타자로 규정함

- 이러한 민족 동질성 부정은 남북한 간 통일 노력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함
- 김일성과 김정일은 통일을 말하면서 자신들의 정권 정당성을 강화했지만 김정은은 민생경제 및 핵 개발을 통한 정당성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치이기도 함

○ 적대적 두 국가론의 의도

- 김정은은 통일론 폐지와 두 개 국가 선언을 통해 북한의 체제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확립하고자 함. 이는 통일보다는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이 깔려 있음
- 김정은이 말하는 남북한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는 김일성 및 김정일 시기의 통일을 목표로 한 기존 대남 정책에서 벗어나 한국과의 관계를 갈등적인 국가관계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반영함
- 북한은 이러한 입장을 통해 남한을 경쟁자이자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며, 북한 체제에 대한 한국의 영향을 차단함으로써 체제 안정을 도모하고 남한을 타깃으로 한 전술핵 무기 개발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함

○ 한국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공격 지속

- 북한은 남한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공격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남한 내 정치적 불안을 조성하려 함
- 남한의 대북 제재 및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여 남한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은 남북 관계를 단순한 민족 간 갈등이 아닌 국제적 진영 대립으로 확대시키려 함. 예컨대, 미국과의 갈등을 이용해 중국 및 러시아

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남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북핵 위협과 군사적 긴장 고조

-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 남북 간 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며, 군사적 대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무엇보다 북한은 핵 능력 강화를 통해 남한을 위협하려는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핵 및 미사일 개발은 남북 갈등 상황에서 북한의 주요한 협상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큼
- 북한의 군사적 행동은 남한에 대한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높이며, 남한의 방어 태세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음

○ 남한의 한미일 협력에 대한 반발

- 한미일 3국의 군사 협력이 강화될수록, 북한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남한을 타깃으로 한 핵 개발을 가속화하고 남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임
- 북한은 이러한 대남 압박을 통해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를 요구하고, 동시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 할 것임
- 특히, 한미일 협력에 맞서 북중러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지속하며,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군사적 대립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음

제4장

안보정세종합평가

제4장 안보정세종합평가

I 세계정세

○ 도전 요인

-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대중국경제 정책이 강화되면서 인-태지역에 다양한 방식으로 파장을 미칠 전망
- 우선 인-태지역이 국제정치에서 지정학적 중심으로 부활하면서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다시 인-태지역 관여 수위를 높이게 될 것임
- 트럼프 2기의 대중국경제 정책에 어느 정도 동참하는지를 놓고 대미 레버리지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역내 국가들의 치열한 거대 게임이 작동될 것으로 전망
- 이 과정에서 역내 국가들이 상호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동맹과 유사입장국 연대가 느슨해지는 도전에도 직면할 것으로 보임
-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나토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안보협력 강화는 한반도 안보와 한국의 나토 안보협력에 위기 요인으로 작용
- 한층 강화된 북러 안보협력의 수준과 내용, 그리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은 한국의 한반도 안보와 주변국 안보 정책에 커다란 도전 요인으로 작용
- 또한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미국과 나토의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는 한국의 방위력 증강 및 동맹 역할 변화 등 도전 요인으로 작용

○ 기회 요인

- 트럼프식 거래 방식이 한편으로는 인-태지역 국가에 대미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은 기회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
- 대중국견제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양자 거래게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전망도 가능
- 한편 미국의 대중국견제로 중국이 맞대응하고 이러한 연쇄작용이 극한의 충돌 기제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신뢰구축조치나 위기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면 불안정성이 완화되는 기회로 작용될 수도 있음
- 우크라이나 재건 및 유럽의 지정학 안보의 장기화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한국의 건설 및 방산 수출에 유리한 환경 조성
- 특히, 트럼프의 나토 정책 등으로 유럽의 방위력 증강 정책이 전망됨에 따라 한국의 대유럽 방산 수출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이미 한국의 방산 수출은 동유럽 시장 진출로 유럽 방산시장 교두보를 확보

II 동아시아정세

[미국]

○ 도전 요인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정책을 재활성화할 예정임. 이는 한미 동맹에도 영향을 미쳐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편적인 기준 관세’와 ‘트럼프 상호 무역법’ 등을 통해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려 할 것임. 이에 따라 한국의 대미 수출에 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전략적 디커플링’을 추진하며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할 예정임. 이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을 의미하며, 한국의 대중 무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기회 요인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정상 외교를 재활성화하며 북미 간 교착 상태를 해소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음. 이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관계 개선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화석연료 개발을 촉진할 예정임. 이는 한국 에너지 기업들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익을 창출할 기회가 될 수 있음

[중국]

○ 도전 요인

- 신질생산력의 추진에 따른 과학기술의 발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산업의 육성은 국제무역에서 중국제품에 대한 우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며, 수출주도형인 한국 경제에 강력한 도전요소로 부상할 것임.
- 대규모의 정부 정책자금 지원 및 거국적인 전략적, 정책적 역량집중을 통해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의 추진은 특히 장기적 측면에서 우리와의 더 큰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미중 경쟁의 국제질서 구조에서, 트럼프의 압박과 더불어 동맹관계의 이완을 도모하는 중국의 압박, 또는 회유로 인해 양국으로부터 모두 압박 받을 가능성이 있음.
- 특히, 미중 경쟁구조에서 중국의 자원수출제한으로 인한 직접적 타격과 국제가격 인상에 따른 간접적 타격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기회 요인

-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을 통해 시진핑의 방한이 이루어진다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볼 수 있음.
-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과 더불어 중국산 제품의 밀어내기 수출 여파로 피해를 입게 된 유럽 등이 자유주의 진영의 연대를 통해 중국에 대응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중국과의 국제무역 경쟁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일본]

○ 도전 요인

- 현재 이시바내각은 단명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고 있으며, 야당으로의 정권교체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이므로, 이시바내각과의 외교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보면 엔저에 안주할 경우 산업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엔저에 의해 일본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은 강해짐
- 엔저가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정부와 기업은 대책을 강구해야 함

○ 기회 요인

- 총선거에서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이 과반수를 얻지 못하게 됨으로써 2024년 11월 11일 출범한 제2차 이시바내각은 소수여당으로 출발
- 자민당내에는 다카이치 사나에와 같은 극우파 정치인들이 있으며, 다카이치의 경우 2024년 9월 27일 행해진 자민당총재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는 1위를 하고도 결선투표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를 당함
- 그런데 이제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이 소수여당이 되어, 야당의 견제가 강해졌으므로 다카이치와 같은 극우파 정치인이 총리가 될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할 수 있음
- 아베노믹스에 대해 비판하는 많은 학자들은 아베노믹스가 의도적으로 엔저를 유지시켜 일본의 수출경쟁력을 높였지만, 그 때문에 일본이 구조조정에 실패하여 산업경쟁력이 저하되었다고 지적
- 이와 같은 논리에 입각하면, 앞으로도 엔저가 지속될 경우 일본의 산업경쟁력은 좀처럼 회복하기 힘들게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우리의 산업경쟁력은 더욱 높아지게 됨

[러시아]

○ 도전 요인

- 러시아의 중국과 인도, 이란 및 북한 등 권위주의 진영은 물론 글로벌 사우스와의 결속력 강화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 있음
- 러시아의 권위주의 진영과의 결속력 강화를 통해 민주주의 진영과의 관계 단절 등 고립 심화. 세계가 이 두 진영으로 굳어지게 되면 세계적 차원의 불안정 심화
-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및 외교적 관계 증진은 한반도 평화에 직접적 장애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한국 주도의 한반도 상황 관리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기회 요인

- 트럼프 공화당 후보 당선 계기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기대감 상승. 전쟁이 이른 시기에 종식될 가능성 큼
- 러시아는 전시 경제 운용을 통해 실질임금상승률 향상 및 내년도 경제성장률 1.7% 수준의 경제회복 토대 마련, 이는 향후 전후 처리과정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상당한 이윤을 얻을 기반 제공

[동남아시아]

○ 도전 요인

- 트럼프 2기는 과거 1기의 거래적 관점을 반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및 한미동맹에서도 리스크가 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자칫 대북억제를 위해 한국이 투입해야 하는 자원이 증가하고 한반도에 발이 묶이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남아시아 지역, 나아가 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상황, 미중 경쟁의 심화, 개도국에 대한 미국의 관여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리더십 약화도 한국에게는 리스크로 작용할 것임
- 특히,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에서 주로 외교적 경고와 견제에 치중한 바이든과 달리 ‘힘에 의한 평화’를 주창해 온 트럼프는 실질적 행동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음
-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관여 감소와 역내 불안정성 야기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반감을 일으켜 반대급부로 중국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고 이는 지역적 차원의 질서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음
- 이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등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해 강화하던 지정학적, 지경학적 이해관계와 관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최근 필리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에 경도되는 추세 하에서, 2025년 필리핀은 더욱 미국과 가까워지는 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국에 더욱 호의적 입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한국의 외교안보 협력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음

○ 기회 요인

- 한-아세안 협력을 미중 사이 양자택일 문제나 대중국 견제의 시각으로 바라볼 경우 한국의 외교적 선택의 폭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음
- 미국의 정책과 미중 관계의 향방과 별개로 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확대해온 아웃리치는 유지, 확대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오히려 트럼프 리스크 속에서 한국이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 설문조사(2019~2024년)를 볼 때 미중 경쟁이 심화될수록 아세안 국가들은 지역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하고 제3의 파트너와 연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졌음
- 과거 트럼프 1기 때에도 미국의 자국중심적, 고립적 정책에 대해 역내 중견국이 협력하여 자유주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고, 이러한 논의들은 2기에서도 확대될 것임
- 미국의 관여와 영향력 약화에 따라 힘의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은 역내 모든 국가에게 위협이 되지만, 그 가운데서 이러한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해 중견국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한-아세안이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함으로써 역내 힘의 균형을 중시하는 아세안으로부터 협력의 깊이와 가치를 인정받고 한국이 아세안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한 것도 한국의 역할 확대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III 북한정세

○ 도전 요인

- ‘적대적 두 국가론’을 기반으로 남한을 교전국으로 규정하며 대남 적대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김정은 체제는 민족적 동질성을 부정하며 남북 협력 채널을 단절하고 통일 관련 상징물 철거 및 남북 갈등 고착화 조치를 시행함
- 남한과의 갈등 고조와 함께 핵 능력 고도화에 열중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전술핵 및 전략핵 개발을 통해 남한과 동북아 안보 구조에 위협을 가하며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추며 선제공격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음
- 북한은 남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이와 함께 남한의 방어 체계를 약화하기 위한 군사적 도발 가능성 또한 증대되고 있음
- 국제정세와 한반도 주변 긴장이 심화되고 있음. 무엇보다 북한의 러시아 군사 지원 및 협력 강화로 북러 간 밀착 증가가 두드러짐
- 동아시아에서 군사적으로 북중러 협력과 한미일 간 신냉전적 대립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 적지 않음

○ 기회 요인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커짐.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북한이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여 북미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미국과 더 밀접한 소통 필요

-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입지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 한국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재가동시키는 경우 러시아 중재로 북한과의 관계 증진 가능성 있음
-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을 위한 국제 공조 가능성 있음.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미국 및 동맹국 간 공조 강화와 함께 미사일 등 북한의 그 밖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도 국제적 대응 체계 구축 가능
- 북미협상이 시작되는 경우 북한 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북한의 대남 정책이 적대 정책에서 관계 개선 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 존재
- 한중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중국 정부와 보다 밀접한 관계 필요

제5장

결론 및 대응 방안

제5장 결론 및 대응 방안

I 세계정세

○ 지정학적 중심성에 동기화된 한국의 인-태지역 관여

- 2025년 한국의 인-태전략 실행 3년차를 맞게되는 시점에 인-태지역이 지정학적 중심으로 복귀한다는 것에 주목 필요
- 전략 3년차는 단순 적용을 넘어 실행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에 지정학적 중심으로 부활하는 시점을 잘 활용하여 한국이 역내에서 선진강국으로서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함
- 다만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항행의 자유작전 참가, 역내 안보 위기시 실제적 참여 등 보다 가시화된 행보가 있어야 할 것임

○ 인-태 역할과 대미 레버리지

- 트럼프 2기의 거래 폭탄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상쇄하려면 대미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는 플랫폼 혹은 한국의 강점을 잘 발굴해야 함
- 특히 아래는 트럼프 2기에도 대미 레버리지는 높일 수 있는 것임
 - 1) 한미일 안보협력 플랫폼
 - 2) 인-태전략의 목표가 방향을 미국과 공유
 - 3) 한국의 우수한 조선 능력
- 한국이 한미일 안보협력 플랫폼을 통해 미국이 한국의 역할 분담을 이해하도록 유도하여 무임승차자가 아님을 각인하는 계기로 활용 필요

- 인-태지역에서 한국의 가시적인 참여 확대를 통해서도 미국이 한국을 유입승차자로 인식하게 하고 이를 통해 거래게임에서도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선순환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
- 특히 한국의 우수한 조선역량을 미국의 해양안보 역량 증가의 핵심 단초로 가동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로드맵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한미 인-태 공조와 대중 레버리지

- 트럼프 2기의 대중국견제는 한국의 대중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함
- 한국은 지정학적 이웃이고 경제협력국인 중국을 상대로 포용외교를 높이는 발판으로 삼는 정책도 필요
- 다만 미국의 대중국견제 동참과 한국의 포용외교가 동기화되기 어려운 지점을 풀어내는 해안이 필요함. 예를 들어 항행의 자유작전에 참가하더라도 ‘인-태 해상교통로 보호작전’ 등 전략적 용어로 변경하여 참가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임

○ 급변하는 한반도 및 국제정세에서 우리의 자강 안보와 동맹 협력 강화해야 함. 이를 통해 한반도 안정을 관리하고 동북아 및 주변 지역에서 협력 안보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토와의 안보협력은 당분간 군사적 협력보다는 정치·안보적 협력 강화에 무게 중심을 둘 필요성이 있음

II 동아시아정세

[미국]

-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한미동맹은 내구성은 유지될 것이나, 동맹 운용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됨
 -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도 한미동맹의 내구성은 유지될 것임. 중국 견제 및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한미 간 안보·경제·기술·에너지 협력의 필요성은 트럼프 대통령도 공감할 것이기 때문임
 -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중심적 동맹관은 방위비 분담금,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한미 연합군사 훈련 등 동맹 운용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정치적 말폭탄으로 재현될 것임.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외교·안보 핵심 참모들도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기여를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것임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SMA) 재협상 요청 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미 체결된 협상 결과를 강조하며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담보하는 방향으로 재협상에 임하는 것이 필요함
 -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루어진 SMA 협상 결과에 상관없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SMA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 선택지는 많지 않을 것임
 - 한국의 경우 SMA 협상 결과를 국회 동의를 받아 일종의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와 ‘조약(treaty)’을 접목시키는 방식으로

국내법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고 있음. 그러나 미국의 경우 SMA 협상 결과에 대해 연방상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롯이 행정협정으로 규정할 수 있음. 행정협정의 경우 조약과 동등한 국내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차기 행정부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철회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이루어진 SMA 협상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우리 측이 기 협상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반대할 법적·제도적 근거가 충분치 않음.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협상 수단으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다시 꺼낸다면 현실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을 것임
- 따라서 기 협상 결과를 부각하며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담보하는 방향으로 재협상에 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우리 측 재협상의 원칙을 세운 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 측의 양보 및 결정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 측과 ‘전략적 주고받기’를 통해 우리의 안보 이익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함

○ 트럼프 2기 행정부 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 후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너무 많은 지원을 했으며, 자신이 당선되면 전쟁을 평화롭게 끝내기 위해 조속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천명했음. 따라서 그는 취임과 더불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 등을 무기로 종전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로서는 협상이 어떠한 조건으로 얼마나 빨리 완료될지 알 수 없으나,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임

- 한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양상을 지켜보며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한러 관계 관리 등 국익을 담보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임
- 한국은 작년 7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올해 추가 3억 불 그리고 내년 이후 20억 불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비롯해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한국은 G7 주도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의체인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에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했음
 - 한국은 전쟁 종료 후 전개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담보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우호적인 지역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임
 - 한편 전쟁에서 한숨 돌린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 수준을 조절하며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위치를 재정립하는데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북러 협력은 전쟁의 진행상황에 발맞추어 점차 약화될 것이며, 전략적 상황과 선택이 변화된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임. 한편 러시아의 효용이 감소하면 북한은 중국, 일본, 미국 등 주변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것임
 - 이러한 전망은 한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할 필요성에 힘을 실어줌. 북러 협력 증대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위협하는 러시아의 무분별한 행태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음. 그러나 북한 문제, 에너지, 식량 안보 등 러시아는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이웃국가임.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용 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전쟁의 막바지에서 양국 관계 유지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조치에는 신중해야 함

- 미국의 대외정책이 대외적 환경 변화와 더불어 국내 유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 따라서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거시적·포괄적 분석보다는 경제, 산업 및 분야별 미시적·개별적 분석을 통해 복합적 대응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특정 분야, 사안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미국 기업, 주(state) 정부 및 정치인, 노동자 및 이해 관계자 등에 대한 미시적·개별적 분석이 필요함
 - 특히 특정 정책 시행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과 더불어 경제적 피해를 보게될 미국 기업, 주 정부 및 의회 의원들 및 해당 지역 노동자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여 미국 행정부를 선제적으로 설득 및 압박하는 것은 보다 유리한 정책적 결과를 산출하는데 기여할 것임
-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세계 최고의 제조 역량을 토대로 첨단기술 및 핵심 분야 관련 주요국들과 협력을 증대하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미래 성장 동력인 첨단기술 및 핵심 분야는 한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함. 따라서 미국 주도의 협력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우리의 미래 경쟁력 및 이익을 담보해야 함. 한편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국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 입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추구하고 중국 시장 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이와 더불어 유럽, 일본, 호주, 아세안 등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 및 연대를 증진시켜 경제적 이익을 담보하는 동시에 향후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정책 동참 압박을 감소 및 회피하는데 활용해야 할 것임

- ‘거래중심적 동맹관’과 ‘미국우선 통상정책’을 토대로 공세적인 행보를 보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 및 관계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적 고려보다는 해당 분야의 독자적 경제 이해관계를 토대로 우리의 실익을 담보하는 실리적 접근법이 보다 효과적일 것임
 -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및 비동맹 여부에 상관없이 노골적으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함에 따라 미국의 동맹 시스템은 상당한 손상을 입을 것임. 이에 따라,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각자도생의 분위기가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미국이 앞장서 동맹국들에게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노골적으로 추구함에 따라 유사한 대응을 동맹국들이 미국에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
 - 한편 이러한 상황은 한미 및 한미일 협력에만 몰두하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소홀했던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에 대한 국내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공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중국]

- 중국의 국가경쟁력 증대에 대한 대응
 -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증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중국이 국제무역시장에서 우리의 강력한 라이벌로 등장하였음.
 - 미래 신기술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영역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예를 들면, 중국과의 협력가능 분야, 경쟁분야, 협력과 경쟁의 공존 분야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산업별, 제품별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됨.

○ 미중 경쟁구도에 따른 대응

- 미중 경쟁구도는 지속적,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전략적 차원의 면밀한 고려가 필요함.
- 미중 경쟁구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사적 이익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며, 이러한 영역에 대한 탐색이 전략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대응

- 중국은 최근 북러관계의 강화에 따라 북한과 다소 소원해지는 추세가 감지됨
-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중국의 역할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

[일본]

○ 이시바내각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

- 이시바내각의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일본 정치구도를 보면 야당의 결집에 의한 야당으로의 정권교체는 쉽지 않으며, 자민당이 중심이 된 소수여당이 계속 유지되거나, 새로운 야당을 연립에 참가시켜 소수여당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음

- 설령 이시바내각이 단명으로 끝난다고 해도 여전히 자민당 중심의 연립정권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이시바내각과 계속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향후 건설적인 한일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함

○ 입헌민주당을 비롯한 주요 야당들과의 관계 강화

- 다만 현재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야당으로의 정권교체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요 야당들과의 관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입헌민주당 대표인 노다 요시히코 등과 같이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계속 접촉면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

- 일본의 방위력 증강이 우리에게 위협요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일본의 증강된 방위력을 한미일 안보협력의 자산으로 만드는 것
-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2023년도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의해 본격화된 한미일 안보협력이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는데,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트럼프 차기 대통령을 잘 설득할 필요가 있음

[러시아]

-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군사 물자의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으로 이어진 상황은 한국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인 만큼 러북 군사협력의 실질적인 진전 추이를 고려한 단계적 대응조치 필요

- 우리 정부는 ‘전훈 분석’ 기능을 포함한 범정부 모니터링단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해 러북 군사협력의 실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수집을 통해 우리의 단계적 대응조치에 필요한 의사결정에 조력 제공
- 트럼프 2기 인사 및 미 의회와 전방위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적극 대응
 - 특히 트럼프 2기 출범과 무관하게 한미 간 연합방위태세 공고화 및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여건 조성으로 대북 억제력 확립
- 한중 간 정상외교, 외교·안보 차원의 교류협력 활성화로 북한군 추가 파병 및 파병 장기화 억제를 위한 전방위 대중 외교 전개
 - 내년도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외교·안보 분야에서 다양한 부대 활동 전개, 국제사회에 북한군 파병의 부당성 적극 홍보 등 국제여론 조성
- 현 상황에서 한러 관계 복원은 적절치 않으나 러북 밀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통을 통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관계 복원을 위한 선제적 준비
 - 외교·안보 당국 간 실무급 협의체 운영 및 Track 2.0에서 한러 간 교류협력 및 소통 지속

[동남아시아]

- 한국은 기존의 인태전략과 KASI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일본 호주, 유럽은 물론 아세안 중견국들과 더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야 할 것임

- 아세안 기반 제도는 물론 최근 인태지역에서 각종 소다자 협력이 활성화되어 있어 한국의 핵심이익이 있는 이슈나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우리가 역내 논의를 주도할 수 있음
 -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 역시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안정성을 한국이나 일본, 호주 등과 같은 제3의 파트너들과의 연대 강화로 상쇄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인 바, 2024년 한-아세안이 체결한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현재 아세안은 Post-2025 공동체의 후속 전략인 ‘아세안공동체 비전 2045’를 준비 중인바, KASI로 대폭 증가한 한-아세안 관련 기금을 통해 ‘아세안공동체 비전 2045’의 중점 분야에 대한 협력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아세안이 핵심으로 삼고 있으나 향후 미국의 관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경제, 연계성, 탄소중립 등에 대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주도할 필요가 있음
- 역내 국가들의 실질적 협력 수요 분야에서 미국의 관여과 기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국이 아세안에 대화와 협력을 제안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면 한-아세안 관계를 넘어 진정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Ⅲ 북한정세

○ 정치적 대응

-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맞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해 남북 간 긴장 완화 노력 강화
- 남북 대화 채널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 지속
- 북한의 민족적 동질성 부정과 대남 선전에 대해 사실에 기반한 대외 홍보 강화

○ 군사적 대응

-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전술핵 개발에 대한 감시 및 대응 태세 강화
-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군사 협력 체계 강화
- 전술핵 대응 능력 및 미사일 방어 체계 현대화
- 북한의 러시아와 군사 협력 심화에 대응하여 동북아 지역 안보 협력 강화
- 국제사회를 통한 북한 핵 군비 통제와 군축 협상 압박

○ 경제적 대응

- 북한의 경제적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국제적 지원 조건 마련
- 북한 비핵화와 연계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시
-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조건부 대화 제안
- 한중 경제협력 강화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활용

○ 외교적 대응

- 북한의 외교적 변화와 유연성 활용
-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이후 북러 관계 심화에 따른 도전과 기회를 분석
-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북한이 가진 전략적 중요성을 국제사회에서 활용
- 트럼프 행정부와와의 협력을 통해 북미 대화 공간 마련
- 한미일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 체계 유지
- 한반도 문제를 동북아시아 및 국제문제로 확대하여 협력 기반 구축

○ 남북 관계 개선 방안

-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민생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조건부 인도적 지원 마련
-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문화 및 민간 교류 촉진
- 북한의 내부 결속 및 체제 유지에 기반한 선전 전략에 대응하여 북한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한 지속적 노력

○ 국제 협력 강화

- 동북아의 안보 균형 유지를 위해 일본, 미국, 중국과의 다자간 협력 체계 구축
-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중심으로 한 국제 연대 강화
- 러시아와의 관계 심화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포함한 무기체계 향상 지체

○ 위기관리 및 대응 방안

- 북한의 전술핵 및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군사적, 외교적 대응 매뉴얼 구축
-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와 국제적 공조 강화
- 북한의 대남 선전과 심리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

2025년 안보정세전망

2024년 12월 31일 인쇄

2024년 12월 31일 발행

저 자 정한범, 김준섭, 하도형, 이숙연, 반길주, 이수형,
두진호, 최용섭

편집·발행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Tel. 041-831-6412

홈 페이지 <http://www.kndu.ac.kr/rinsa>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ISSN 2586-3673

〈비매품〉

2025년도 안보정세전망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황산벌로 1040

tel. 041-831-6412

<http://www.kndu.ac.kr/rinsa>

